

제 4 대 한겨레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소개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2013/07/03 11:47.47

### 한겨레 시민편집인 현황

한겨레는 2013 년 7 월, 4 기 시민편집인(고충처리인)으로 고영재 전 경향신문사 사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영재 시민편집인의 첫 칼럼은 2013 년 7 월 26 일에 게재됩니다.

### 고영재 시민편집인 소개



고영재 4 기 시민편집인은 1948 년에 태어나, 서울 배명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74 년 경향신문 기자로 입사한 그는 1980 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언론자유 운동을 벌이다 강제 해직됐다. 1991 년 한겨레에 합류해 <한겨레 21> 초대 편집장과 논설위원, 12 대 편집국장을 지냈고, 2006~2008 년 경향신문사 사장을 역임했다. 기자 시절 날카로운 시각과 특유의 따뜻한 필체로 많은 독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지금은 전남 장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쓰고 있다.

[6 월 19 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 살 수 있었던 비법 알려달라

독자 의견 2013/07/05 17:14.55

### [6 월 19 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 살 수 있었던 비법 알려달라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를 걸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 살 수 있었던 비법을 알려주는 기사를 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요새 <한겨레>가 시민과 함께 '전두환 숨은 재산 찾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응원한다"며 "29 만 원만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행적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도 써 달라"고 제안했다.

[6 월 20 일] 큰따옴표 속 문장 다르게 편집하면 어떨까

독자 의견 2013/07/05 17:21.32

### [6 월 20 일] 큰따옴표 속 문장 다르게 편집하면 어떨까

한 남성 독자는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지면 기사에서 큰따옴표 속에 들어가는 문장은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굵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6 월 21 일] 관련 기사 표기 따라가 보니

독자 의견 2013/07/05 18:24.40

**[6 월 21 일] 관련 기사 표기 따라가 보니**

한 남성독자가 오늘 자 1 면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위기 대학생들 시험 앞두고 달려왔다' 기사의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첫 문단이 끝나고 '관련기사 8 면'이라고 적혀 있어 따라가 봤으나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며 "대학생들이 나라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으나 표기와 달리 8 면에는 관련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간 때부터 <한겨레>를 보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충실하고 정확하게 다루어달라"고 부탁했다.

[6 월 24 일] 과격한 댓글은 삭제하면 안 되나

독자 의견 2013/07/05 18:31.59

**[6 월 24 일] 과격한 댓글은 삭제하면 안 되나**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온라인 기사들에 달린 댓글 중 과격한 댓글은 삭제해 달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거나 무조건 비난을 하는 댓글도 지워지지 않고 기사에 달려있다"며 "<한겨레> 온라인 뉴스팀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댓글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 월 27 일] 중앙일보와 사설 함께 실어야 하나

독자 의견 2013/07/05 19:01.45

**[6 월 27 일] 중앙일보와 사설 함께 실어야 하나**

창간 때부터 <한겨레>를 애독해 왔다는 96 세 남성 독자는 "최근 '사설 속으로'라는 지면에서 '한겨레' 사설과 '중앙일보' 사설을 함께 싣는데 의미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논술 교육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 의견] 주식시세표 빼긴 아직 일러

활동 기록 2013/07/29 13:32.08

**[독자 의견]**

**주식시세표 빼긴 아직 일러**

강원도 평창에 거주한다는 남성 독자가 19 일 전화해 "5 월부터 주식시세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까운 증권거래소는 원주나 강릉에 있어 주식시세표 지면을 모아두고 흐름을 읽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 월 지면 개편으로 주식시세표가 빠진 이후 "주식 시세를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세표를 지면에서 빼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등 여러 독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7 월 26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726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7261.html)

[독자 의견] 촛불집회 적극 보도했어야

활동 기록 2013/07/29 13:33.25

**[독자 의견]**

**촛불집회 적극 보도했어야**

지난 15 일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지난 주말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2 만명이 모였는데 왜 1 면에 실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그는 "9 면에 작은 흑백사진만 실고는 촛불집회 관련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2 일 또다른 독자는 "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중대 사안인데, 수만명이 모인 촛불집회에 대해 방송이고 신문이고 '꿀 먹은 병어리'"라며 "<한겨레>가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7 월 26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7169.html>

[댓글 중계]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은 짜고 치는 고스톱?

활동 기록 2013/07/29 13:35.49

#### [댓글 중계]

####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은 짜고 치는 고스톱?

#### '국면 전환용' 아닌지 결과 지켜보아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 억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 일 전 전 대통령 및 친인척을 압수수색 하자 관련 기사들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특히 17 일치 '시공사 이달초 서류 빼돌렸나' 기사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대표인 시공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서류문지들이 빠져나간 정황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디 '꿀단지'는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압수수색할 거라고 광고하고 다녔는데 나 같아도 빼돌렸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썼고, '정빠'는 "추징시효 앞두고 쇼할 시점 노리다가 이때다 싶은 거"라며 "실제 얼마나 추징할꼬. 지난 세월 이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미카엘'은 "왜 우리나라가 몇몇 후진국 빼곤 가장 부패한 나라에 선정됐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이제 알랑가 몰라"라고 비꼬았다.

반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자는 의견도 많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일을 이번 정부가 하는 것은 국민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James)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해서 다행"(innisfreez)이라고 적었다. 'NTforce'는 "전 전 대통령 풀어준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에 큰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HL0B94'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하죠?"라고 물었고, 'Mimik Momo'는 "국면전환을 위해 전두환 카드를 꺼낸 느낌이 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그지같은세상'은 "추징금 환수 결과를 보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 있지"라며 의미심장한 댓글을 썼다.

<한겨레>가 독자·시민과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는 '클라우드소싱'을 진행하고 관련 보도를 하는 데 칭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서진'은 "이런 기사는 한겨레 말고는 아무도 못 올리는 현실"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7 월 26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7170.html>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편집국장의 침묵

활동 기록 2013/07/29 13:43.50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편집국장의 침묵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mailto:kimyh@hani.co.kr)

[시민편집인의 눈]

독자 10 여명 뜻 담긴 질문지 전달...답변 빠진 회신 실망  
박근혜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등 3 가지 문제 고뇌 기대

<한겨레>는 어둠의 시대 한줄기 빛으로 태어났다. 그 빛은 세상을 바꾸는 데 한몫했다.  
<한겨레>의 투박한 열정은 폭압의 시대를 끝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언론계에 던진 충격파도 만만치 않았다. 적어도 '소금'으로서의 <한겨레>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염치없는 세상,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다.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체계가 뒤죽박죽이다. <한겨레>의 그 투박한 열정을 그리워하는 소리가 높다.

첫 칼럼인 만큼 유강문 <한겨레> 편집국장에게 독자들의 비판과 아쉬움을 모아 전달할 필요를 느꼈다. 지난 19일 독자들의 뜻이 반영된 질문서를 전달했다. 이미 10여명 독자들을 만난 터였다.

나흘 뒤 편집국장의 전자우편이 날아왔다. 그러나 답변이 빠진 채였다. 곤혹스러운 심경을 담은 짧은 회신이었다. 난감했다. 칼럼의 열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길은 많다. 궁하면 통한다고도 했다.

'대답 없는 질문지를 그대로 공개하자.' 편집국장에게 보낸 질문지는 독자들의 의문이자, 한겨레의 숙제를 담고 있는 터다. 그 질문지는 앞으로 시민편집인이 <한겨레> 지면을 탐색하는 데 나침반이 될 것이다. 몇 마디 보충질문이 보태졌음을 밝힌다.

편집국장에게 던진 질문은 크게 세 토막으로 이뤄졌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박근혜 시대의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집중했다.

-한 시인이 절필을 선언했다. '파국을 향해 치닫는 시대'를 바라보는 시인의 고뇌가 엿보인다. 시인의 감수성을 언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 '몰염치'가 판치는 세태에 절망하고 있다. 정치개혁, 경제민주화는 그 뒷전의 문제이다.

-언론의 할 일은 그 거짓과 불의의 시대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닌가. 특히 정치인의 정략적인 말을 여과 없이 '중계'함으로써, 언론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체제의 '반칙'과 '몰염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치열하지 않다. 나라의 기틀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한 태도가 어정쩡하다. 비판적 보도 한편으로는 '정쟁'을 그대로 옮기는 편집태도도 엿보인다.

-창간 때의 '초심'과 '투혼'이 그림다.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의지도 약화된 느낌이다.

-자본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에서 불안을 느낀다.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자본 시장에 몸담고 있는 <한겨레>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딜레마를 어찌 돌파할 것인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겨레>의 선택을 탓하는 독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독자들을 설득하고, 현실에 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겨레>의 전술적 선택에 문제는 없을까. 특히 진보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겸손하지 않은 진보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

-진보콤플렉스도 한겨레의 활력을 해친다고 보진 않는가? 이념적 깃발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행동반경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보수-진보의 틀에 꿰맞춰 사회를 보는 방식이 적절한가? 스스로 이념적 좌표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 논란을 진영논리로 볼 때 논란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명백한 거짓말을 '진영의 방패' 뒤에 숨어 외치는 현상도 있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조중동'이 거짓과 불의 앞에서 <한겨레>와 다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은 적이 아니다. 그들과 언론의 발전을 위해, 사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을 용의는?

-한겨레의 '진보를 위한 진보', '차가운 진보'를 비판하기도 한다. 자연과 인간, 순리에 대한 통찰과 따뜻한 애정 없는 진보주의는 얼마나 공허한가.

디지털 세상은 활자 매체의 운명을 옥죄고 있다. 미처 손 쓸 틈을 주지 않고 종이신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디지털 문명은 종이신문의 콘텐츠, 취재시스템에 혁명적 변신을 요구한다.

-디지털 시대의 신문 뉴스 개념도 바뀐 것 아닌가. '시대의 기록'으로서 신문의 구실도 재검토 대상이다. '테라바이트' 메모리 시대에 '단순한 기록'은 디지털에 넘길 때다.

-신문들이 탐사보도, 심층보도를 강화하며 디지털 시대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독자들도 '보도 자료' 아닌 독자적인 취재물을 원한다. 심층 취재물 강화 전략은?

-한겨레는 '사실'보다 '기획 의도'가 강렬하다. 발로 뚫 기사, 땀방울이 뻗 기사가 그림다. 취재시스템의 변혁, 기자 출입처 제도의 혁파를 결행할 때 아닌가?

-이른바 '진보지'도 탁상 위의 산물이라면 의미 없다. '진보'가 관념의 유희가 아님도 물론이다. 진보지라면 무엇보다 땀과 열정이 담긴 기사로 말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불만의 소리는 끝없이 이어진다. 독자를 가르치려 든다. 때로는 지식을 과시하는 듯, 기사 문체가 어렵다. 정치 칼럼 재미없다. 교과서적인 얘기, 필자와 시각의 다양성이 빈약하다. 칼럼난은 영감을 주는 다양한 필자들에게 폭넓게 개방하라. 기사에 인용되는 전문가 코멘트의 편중도 기계적인 느낌을 준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한겨레에 대한 기대는 아직 크다. 그만큼 독자들의 눈초리는 매섭고 간절하다. 한겨레가 자랑하는 높은 신뢰도는 한겨레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한 치의 오차, 한 올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디테일의 법칙'은 한겨레에 한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자들은 <한겨레>가 '짜통민주주의'를 방조한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한낱 '진영의 율타리'로 진보를 활용함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걱정의 소리도 들린다. 디지털 문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편집국장의 '답변 사양'이 서운했다. 그러나 곧 납득할 수 있었다. 그에게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 승패에 자유로운 장기판 훈수꾼의 말에, 어찌 항변할 말이 없겠는가. 그의 침묵을, 새로운 <한겨레>를 위한 고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해한다.

##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서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

[7월 16일] 반려 동물 키우기의 이면도 보도해 달라  
독자 의견 2013/09/11 15:13.59

### [7월 16일] 반려 동물 키우기의 이면도 보도해 달라

평택에 살고 있다는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반려 동물 키우기의 이면'도 짚어서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개를 키우는 처지에서만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것도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사회문제들도 파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 월 18 일] 독도 문제가 더 중요해  
독자 의견 2013/09/11 15:20.42

#### **[7 월 18 일] 독도 문제가 더 중요해**

한 여성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를 걸어 "요즘 NLL 문제로 말이 많은데, 독도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멀리보면 통일을 할 북한과의 NLL 문제보다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7 월 25 일] 민생 문제 더 많이 다뤄야  
독자 의견 2013/09/11 15:23.59

#### **[7 월 25 일] 민생 문제 더 많이 다뤄야**

시민편집인실로 연락해 온 한 남성독자가 "'한겨레'가 노동을 비롯해 다른 부분들은 잘 다루고 있는데, 민생 문제는 세심하게 짚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큼직큼직한 문제를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도 깊이 다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독자 의견] '섭하지'는 잘못된 표현  
활동 기록 2013/09/11 16:58.14

#### **[독자 의견]**

##### **'섭하지'는 잘못된 표현**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8 일치 25 면 '물놀이만 하고 시장 구경 빼먹으면 섭하지' 기사의 '섭하지'가 '섭섭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글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데 힘쓰는 <한겨레>가 누군가의 우스갯소리를 인용한 것도 아닌데,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8월 30일자, 20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1520.html>

[독자 의견] 새로운 저널리즘 형식 안 보여

활동 기록 2013/09/11 16:59:16

### [독자 의견]

#### 새로운 저널리즘 형식 안 보여

온라인과 지면을 꼼꼼히 비교하며 읽는다는 남성 독자가 28일 전화해 “<한겨레> 역시 종이신문의 위기를 말하지만 새로운 저널리즘 형식에 도전하는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을 2차 플랫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 혁신적인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험적인 보도형식을 지향하는 <가디언>과 <뉴욕 타임스>를 거울삼을 것”을 당부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8월 30일자, 20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1425.html>

[댓글 중계] '우리 안의 비정규직' 많아도 너무 많아

활동 기록 2013/09/11 17:02:15

### [댓글 중계]

#### '우리 안의 비정규직' 많아도 너무 많아

#### 이웃 간 웃음 사라져 안타까워...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나서야

지난 7일부터 다섯 차례 연재된 '우리 안의 비정규직' 기획기사 시리즈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아이디 '준비된 아빠'는 “비정규직, 외주업체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썼고, '후유'는 “우리 안의 비정규직 많아도 너무 많아요”라고 개탄했다. 'rare\*\*\*\*'가 “같은 일을 한다면 응당 같은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수환'은 “억울하면 출세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非'(비) 자 붙은 사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라고 했다.

'Lee'는 "사회가 조금만 더 원칙이 서고 정의가 서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노동체계를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텐데"라며 "우리 사회에 점점 이웃 간의 웃음이 사라져서 안타깝네요"라고 우려했다. '바른말만 하자'는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오로지 근무기간에만 있다"며 "아이엠에프(IMF) 이후 악화된 양극화의 치료법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unma\*\*\*\*'는 "회사가 계속 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체제에서는 10명 중 9명이 루저"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줘야"라고 적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을 다룬 7일치 '월급 얘기 나오면 서먹해지는, 우린 단짝입니다' 기사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다. '정애리'는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보다) 적다는 건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전 4200 만원에 결혼도 못 하고 홀어머니랑 빠듯하게 산다는 뜻이 말씀하시는 건 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jojo\*\*\*\*'는 "요점은 4200 만원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 비정규직 동료들은 고려하지 않는 정규직 노조, 이 모든 것들이 만든 부조리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반박했다. '도루왕이대호'도 "'둘 사이에 학력, 능력의 차이는 없다. 그저 운명의 차이일 뿐'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네요"라며 공감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8월 30일자, 20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1424.html>

[8월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독재의 징후, 침묵하는 언론  
활동 기록 2013/09/11 17:05:41

**[8월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독재의 징후, 침묵하는 언론**



kimyh@hani.co.kr

#### [시민편집인의 눈]

명백한 헌법유린에 눈감은 언론은 위험한 징후  
'박근혜 정부 6개월' <한겨레> 기획기사 '무기력'

박근혜 대통령 어법의 절제미는 일품이었다. 말은 아꼈수록 그 위력은 커지는 법. '박근혜표 약속은 실천된다'는 이미지도 그 절제된 어법의 부산물이었다. 그는 시의적절한 캐치프레이즈를 선점하는 데도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대선 과정에서 그 재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서화합' '탕평 인사'. 적어도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아름다운' 말들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닳을 올린 지 6개월이 지났다. 긴 침묵 끝, 간간이 한마디씩 던지는 절제된 어법은 여전하다. 그 간결한 어법 속에서 박 대통령 약속의 실제, 국정철학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공약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소리 없이 뒤집혔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성의껏 설명하는 법도 없다. 경제민주화, 복지는 기대 수준을 한참 벗어나고 있다. 사람을 쓰는 데도 웅졸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도 드러났다. 특히 최근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민생 문제라면 언제든 여야 지도부와 만날 생각이다.” 야당 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구를 일축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동문서답’은 상식적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박 대통령이 애써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국가기관의 헌법 유린 행위, 이를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변하는 그 뻔뻔함에 분노하는 터다.

범법 자체보다 무서운 일은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범죄 불감증’이다. 여기서 비롯된 몰염치, 불의의 기풍이 뿔어낼 독소가 겁난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떼와 같다’는 천주교 사제들의 목소리에는 ‘불의의 사슬’에 대한 걱정이 배어 있다.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독재의 징후를 읽는다. 국민의 소리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는 터다.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 집권당의 침묵은 그 위험한 징후를 부채질한다. 언론 역시 안성맞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언론은 사태의 본질을 눈감고 있다. 명백한 헌법 유린행위를 눈감고 여야 다툼을 평면적으로 ‘중계’하고 있다. 어느 말이 옳고 그른지 명쾌한 판단은 없다. 대신 ‘정쟁’만 치열하다.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는 한층 굳어지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언론은 박정희 시대의 침묵을 능가하는 무서운 해악을 내뿜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폭압의 유전자’를 이식시킨 시대로 기록될 박정희 시대는 차라리 한 가닥 염치가 살아 있었다.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박정희는 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때로는 문책 인사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스처도 보여줬다.

수백명 언론인을 거리로 내몬 박정희의 폭압도 염치가 남아 있음을 알리는 서글픈 아이러니였다. 언론 탄압은 민심에 대한 독재자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의엔 누구나 분노했던 시절, 언론 정신이 아직 숨 쉬고 있었다.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양심, 적어도 불의에 맞설 용기가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염치가 언론에 남아 있었다는 증거는 많다. '유신' 말기 민심이 들끓고 있던 시절,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신문의 젊은 기자들 대부분 독재에 비판적이었다.

오늘은 '무장해제'된 언론의 맥 빠진 보도가 있다. 명백한 '독재의 징후'를 보고도 눈감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언론을 겁내지 않는다.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언론은 오히려 '방패' 구실에 충실하다. 스스로 알아서 막아 주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침묵이 강요된 것이었다면, 박근혜 시대의 침묵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한겨레>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책무는 무겁다. 그러나 <한겨레> 지면에서도 '매너리즘'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23 일치 6 면은 다소 생뚱맞은 느낌을 준다. 국정원의 불법에 대한 끈질긴 보도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기력한' 보도였다.

<한겨레>는 이날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다뤘다. 외교 및 남북관계, 정부·청와대 인사 및 국내정치, 경제 정책 등 3대 현안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기사는 날카로움도, 깊이도, 정교함도, 진지성도 보이지 않았다. 독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주제가 아니었던 만큼 기사의 역동성이 느껴질 리 없다. '출범 6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이정표에 꿩맞춘 작위적 기획물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시대의 '위험한 징후'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뜻밖이다. 정의가 짓밟히고 상식과 염치가 사라진 야만적 현상이야말로 국가동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변수 아닌가. 집권 초기의 분위기는 집권 5년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터다. 차라리 이날의 '메인 상자 기사' 주제, '1인 리더십'의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을 법하다.

높은 지지율에 대한 맹목적인 의미부여도 여느 언론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마땅찮다. 여론조사의 허점을 굳이 들먹일 필요는 없겠다. 지지율이 제아무리 높다 한들 나치 치하 히틀러의 인기를 따를쏜가. 여론조사 숫자는 가볍게 참고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혹시라도 그 숫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가져올 대통령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 특히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의 원상회복에 대한 <한겨레>의 관심이 아쉽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의 확보가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당한 비판 활동으로 해직된 언론인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시급한 숙제 아닌가. 이름뿐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처분만 바라볼 일인가.

바야흐로 참말이 사라진 시대다. 대통령의 오만을 충고하는 집권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헌법 유린을 비판하는 '촛불'이 오히려 '종북'으로 매도되는 세상이다. 불의의 시대, <한겨레>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 이 칼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한겨레> 2013년 8월 30일자, 20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1427.html>

[8월 6일] 여론조사 응답률 % 안 나올 때 있어

독자 의견 2013/09/11 17:11.59

[8월 6일] 여론조사 응답률 % 안 나올 때 있어

한 중년 남성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평소에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기사를 보면, 응답률이 몇 %인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여론조사 신뢰도와 '한겨레'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정확히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8월 7일] 비정규직 기사 보완해야

독자 의견 2013/09/11 17:29.55

**[8 월 7 일] 비정규직 기사 보완해야**

한 남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와 "오늘 현대차 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료를 비교한 한겨레 기사를 읽었다"며 "원래 취지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박한 대우를 받는 것일텐데, 기사 내용만 읽어서는 비정규직 연봉이 세전 4200 만원이다보니 일반 서민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기사 내용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한겨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 월 28 일] 택시 요금 올라가면 서민 부담 가중되나  
독자 의견 2013/09/11 17:39.52

**[8 월 28 일] 택시 요금 올라가면 서민 부담 가중되나**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 기사와 관련해 의견을 전했다. 그는 '서울 택시 기본료 2900~3100 원으로 10 월 올린다' 기사에서 지난 8 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서민들이 보통 타는 것은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부담 없이 타라고 만든 것이 택시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 택시 요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다"며 "승차 거부 때문에 택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가 많지만, 이 부분도 물가와 비교해 합리적인 택시 요금을 책정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 월 2 일] '옵스큐라', '크리틱' 어려운 코너 이름 안 바꾸나  
독자 의견 2013/09/11 17:43.36

**[9 월 2 일] '옵스큐라', '크리틱' 어려운 코너 이름 안 바꾸나**

한 여성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웁스큐라'나 '크리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코너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코너명들을 이해할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되겠냐"며 "우리 회사 직원이 100 명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보여주는 코너에 어울리는 쉬운 말이 많을텐데, 사진전문잡지도 아니고 '웁스큐라'라는 어려운 단어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내가 아는 것이니 너희도 알아야 한다는 사고를 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9 월 5 일] '낙인'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  
독자 의견 2013/09/11 17:50.27

**[9 월 5 일] '낙인'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

한 남성독자가 전화해 1 일 자 '김형민의 응답하라 1990' 시리즈의 '니 전라도가? 유명처럼 떠도는 불멸의 낙인' 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낙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글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몹시 기분이 나쁘다"고 전했다.

[9 월 10 일] '4 촌의 조카'나 '종질'이라고 해야 맞아  
독자 의견 2013/09/11 18:03.56

**[9 월 10 일] '4 촌의 조카'나 '종질'이라고 해야 맞아**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를 걸어 오늘 자 10 면 '박 대통령 5 촌 조카 수억 원대 사기' 기사에서 '5 촌 조카'라는 명칭이 틀렸다고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큰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 외손자라면 '4 촌의 조카' 혹은 '종질'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독자 의견] '낙인', 함부로 쓸 말 아니다  
활동 기록 2013/09/30 22:46.14

**[독자 의견]**

**'낙인', 함부로 쓸 말 아니다**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낙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그는 5 일치 34 면 '불온한 전라도의 힘'(야! 한국사회)과 8 월 31 일치 22 면 '니 전라도가? 유령처럼 떠도는 불멸의 낙인'(김형민의 응답하라 1990) 등을 들며 "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떠나 '낙인'찍힌 것이 기정사실인 양 여과 없이 내보내는 <한겨레>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사회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겠지만, 오히려 틀을 지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9 월 27 일자, 29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4724.html>

[독자 의견] 어려운 코너 이름 바꿔야

활동 기록 2013/09/30 22:49.19

[독자 의견]

어려운 코너 이름 바꿔야

2 일 한 여성 독자가 전화해 "'옵스큐라'(금요일치 사진칼럼)와 '크리틱'(토요판 비평칼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코너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우리 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뜻을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친절한 신문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그는 "사진전문잡지도 아니고 내용에 어울리는 쉬운 말이 많은데 '옵스큐라'라는 어려운 단어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9 월 27 일자, 29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4856.html>

[댓글 중계] "역사는 진실"...교과서 바로잡아야

활동 기록 2013/09/30 22:51.34

[댓글 중계]

"역사는 진실"...교과서 바로잡아야

"표절과 오류로 물리니 색깔론으로 방패"

최근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의 교과서 관련 사실과 기사들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특히 12 일치 1 면 '오류·왜곡 교과서 저자 불러놓고...국회의원들 박수 세례' 기사에는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 의원 등에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디 'dhkimcleo'는 "역사는 좌우이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려는 세력에 의해 왜곡·편향되는 것"이라고 썼고, 'jppoo2'도 "이렇게 계속 정치 분쟁화시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다"고 적었다. 교과서 저자를 가리켜 '깃발'은 "좌파 척결이라는 부분에만 폭 빠져서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강화필부'는 "표절과 오류로 물리니 색깔론으로 방패를 치는구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군봉'은 "영터리 교과서? 영터리인지 아닌지는 독자가 판단하는 거"라고 주장하자, 'bosday73'은 "그럼 당신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고 믿으시나요?"라고 반문했다.

'hyoker3690'은 "나라의 지도자가 이것 또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순치시킨다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또 이처럼 하지 말라는 법 없다"고 우려했다. 'Kang Hongyong'은 "독재를 그리워하는 자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자, 극우단체들과 민주사회 단체들의 양극화 현상이 최고조"라며 "(한겨레가) 그대로 보도해주고 기록을 남겨 후세 역사가들에게 그래도 양심 있는 언론매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9월 27일자, 29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4723.html>

[9월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이석기의 짓값, 대통령의 금도(襟度)

활동 기록 2013/09/30 22:54.35

[9월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이석기의 짓값, 대통령의 금도(襟度)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시민편집인의 눈]

한겨레는 이석기 사건 실제 접근하는 데 최선을 다했나

소통없는 강자의 독선은 무서운 독을 내뿜게 마련

어지러운 세상이다. '음습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 신문 독자들은 혼란스럽다. 국정원의 헌법 유린과 국정원 개혁 논란, 그 소용돌이 속에서 터진 '내란음모' 사건,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 청와대의 검찰총장 '내치기' 의혹 등 일련의 사태는 한결같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하고, 국가 전복을 노린 폭동을 모의했다.' 국정원이 던진 충격파는 블랙홀이 되어 모든 현안을 일거에 삼켜버렸다. '국사범 이석기'는 언론과 여론의 못매를 맞으며 구속 수감됐다.

동료 의원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토끼몰이'의 기세는 거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커밍아웃'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잠자고 있던 '의원 제명안'이 되살아나는가 하면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한 해산론이 불거지기까지 했다.

이 의원의 언동이 상식을 배반한 것은 사실이다.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의 내용은 이 의원의 변명을 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의원도 참석한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대중의 눈높이엔 걸맞지 않았다. 문제 해결 방식이 폭력·파괴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거부감은 컸다.

국정원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 요건을 갖췄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실현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의 처신은 마땅히 비판받을 만하다.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터다. '종북의 냄새'만으로도 폭넓은 알레르기 반응을 빚어냈다. 이는 진보진영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역시나 때를 만난 듯, 새누리당은 한때 '야권 연합'의 짝꿍이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는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이 한때 잦아들 정도였다.

이 의원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만큼의 '짓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국정원·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죄목에 걸맞은 엄정성이 요구된다. 짓값은 정당하게 요구하되, 여론의 파도에 떠밀려 애먼 돌팔매질을 할 일은 아니다.

한편, 국정원의 짓값이 어물쩍 묻혀서는 안 될 일이다. 국정원의 범죄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헌법 체계를 짓밟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굳이 범죄의 크기를 헤아린다면,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을 오히려 능가한다. 조직력과 실현성, 범죄에 대한 불감증 등을 고려할 때 무서운 국기문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무덤덤한 반응은 실로 놀랍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자이자, 사건 당시 대선의 당선자로서 어찌 무관하단 말인가.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와도 공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마당이다. 국정원의 개입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의 실제 크기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도 국정원 범법·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채동욱 총장은 사건의 주범이라 할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법무부 감찰, 총장 사퇴 선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취재 보도 과정은 정당했는가. 저널리즘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가 어떻게 활자화될 수 있었나. 불순한 권언유착의 산물 아닌가. 청와대는 정녕 뗏뗏한가. 3 자회담에서 채 총장 감찰에 대해 밝힌 대통령의 입장은 앞뒤가 맞는가. 어렵게 마련된 3 자회담 자리에서 대통령은 난국 타개의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했는가.

문득 대통령의 금도(襟度)를 떠올린다. 금도, 의미심장한 말이다. 인간 세상의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숨어 있는 말이기도 하다. 금도에 담긴, '도량' '배려' '분별'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 등의 의미를 곱씹어 볼 일이다. 무릇 금도란 강자의 덕목이다. 그것은 힘센 자의 탐욕과는 거리가 먼, 약자를 포용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 아닌가. 배부른 사자가 눈앞의 먹이를 두고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공격할 때 활용하는 단골 무기, '민생'을 새삼 반추해 볼 필요를 느낀다. 국가기관이 앞장서 나라의 기틀을 뒤흔드는 일은 민생과 무관한 일인가. 나라의 화평이 민생의 근본인 터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세상의 '배부른 돼지의 삶'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생'이 아닐 터.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도 안타까운 일이다. 약속 파기를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모면하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백성의 허허로운 지갑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로 아니었던가. 한 표라도 더 얻어 보겠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약속한 것이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후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3 자회담 풍경은 아름답지 못했다. 소통 없는 강자의 '원칙'은 독이다. 독선은, 특히 강자의 독선은 무서운 독을 내뿜게 마련이다. 약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강자의 금도 아닌가.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애독자든 아니든, <한겨레>에 대한 기대는 유별나다. 그것은 엄정한 잣대에 대한 오랜 목마름 때문이다. 이석기 사건 이후 <한겨레>는 대체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다소 성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결과적으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한겨레>도 합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적어도 녹취록의 무대인 5 월 모임 참석자를 찾아내 만나 본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9 월 24 일치 <한겨레> 사설 '불통 정권에 백기 든 무기력한 야당'은 역설적으로 언론이 남긴 불행한 상처의 흔적이기도 하다. 적절한 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쪽으로 기운 한국적 언론 환경의 소산이기도 한 터다.

※ 이 칼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http://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mailto: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10월 7일] 촛불집회 기사는 이제 없나

독자 의견 2013/10/31 14:54.46

[10월 7일] 촛불집회 기사는 이제 없나

한 여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이제 촛불집회 기사는 실어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촛불집회가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뒷면이라도 실어달라"며 "큰 면은 할애하지 않더라도 촛불을 꺼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 월 16 일] 노동 문제 더 깊이 다뤄야

독자 의견 2013/10/31 14:55:00

**[10 월 16 일] 노동 문제 더 깊이 다뤄야**

건축 현장에서 도장 일을 하는 한 남성독자가 전화를 걸어 "한겨레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노동 관련법에도 허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취재해서 다뤄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나는 도장 일을 하지만, 페인트, 보일러, 타일공, 미장이 등 다양한 하청 일을 받아 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우리 노동 관련법은 일용직만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일을 시켜놓고도 인건비를 떼어먹거나 재료비나 물건비 든 것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 일이 있어도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부도 노동자보다 거대 기업과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말하고는 "노동 관련법의 허점을 중심으로 노동 문제의 구체적인 사안을 더 자세히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10 월 21 일] 사실과 다른 내용 있어

독자 의견 2013/10/31 14:55:10

**[10 월 21 일] 사실과 다른 내용 있어**

한 남성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오늘 자 25 면에 실린 '군포시의 독서 혁명'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다. 그는 "세 번째 문단에서 '독서 골든벨'의 최고상 수상자가 72 세 할머니로 되어 있는데, 최고상을 받은 사람은 제 부인"이라고 지적했다.

[10 월 21 일] '무료관람' 의미하는 바 애매해

독자 의견 2013/10/31 14:55:19

**[10 월 21 일] '무료관람' 의미하는 바 애매해**

한 남성독자가 전화를 걸어 18 일 치 호남판 10 면에 실린 '광주비엔날레 10 명 중 7 명 무료관람' 기사에서 "'무료관람'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읽어보면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 관람 전시를 늘린 것"인데, "기사 제목과 서두만 읽으면 마치 유료 관람을 해야 할 행사에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처럼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 이해하면 돈 내고 비엔날레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론지인 '한겨레'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10 월 25 일] 독도의 날에 관련기사 없어

독자 의견 2013/10/31 14:55.29

**[10 월 25 일] 독도의 날에 관련기사 없어**

한 남성독자가 전화를 걸어 "오늘(10 월 25 일)이 독도의 날인데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지도와 관련한 짧은 기사 하나만 나오고, 그 외에 독도와 관련한 현안 등은 기사를 볼 수 없다"며 "'한겨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 문제를 다뤄야 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독자 의견] 발달장애 아동이 무슨 죄

활동 기록 2013/10/31 14:55.42

**[독자 의견]**

**발달장애 아동이 무슨 죄**

16 일치 2 면 '저작권 회수'를 다룬 장봉균 화백의 '한겨레 그림판' 내용 중 "발달장애야? 그렇게 싫으면 우리 주든지~"와 관련해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한 여성 독자는 "모자란 짓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말인데, 학교에서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것과 무슨 차이냐"며 "장애아동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헤아리지 않아 실망했다"고 전했다. 다른 남성 독자도 "저작권과 발달장애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한겨레'가 발달장애 아동 가족을 위로는 못 해줄망정 깊은 생각 없이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10 월 24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8455.html>

[독자 의견] '책과 생각' 토요판에 실었으면  
활동 기록 2013/10/31 14:55.52

#### [독자 의견]

##### '책과 생각' 토요판에 실었으면

9 월 30 일 한 여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읽어볼 만한 책 내용을 자세히 짚어주는 '책과 생각'을 토요판으로 옮겨 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엔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바쁘다"며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제일 좋아하는 책 코너인 만큼 토요일에 여유 있게 점검하며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10 월 24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8456.html>

[댓글 중계] "감정 없는 좀비가 돼버린다"는 엑스트라  
활동 기록 2013/10/31 14:56.03

#### [댓글 중계]

##### "감정 없는 좀비가 돼버린다"는 엑스트라 드라마에선 정의가 승리하지만 제작자는 악역보다 비열

취재진이 직접 드라마 보조출연자로 일해보며 쓴 '엑스트라 쥐어짜는 드라마 왕국' 기사 시리즈에 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아이디 '노는새'는 "잘나가는 배우한테는 수억 출연료로 베풀하면서 엑스트라는 최하 일용직 일당"이라며 "그것마저 갑을 관계 들먹거리며 돈 뺏어 먹고, 영화·드라마판은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비판했다. 'basecampk'는 "이것이 한류의 힘"이라고 비교했고, 'kdsun'도 "이젠 편안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볼 수가 없을 거 같다"고 썼다.

특히 '밥그릇에 담긴 차별'(10 월 7 일치) 편에는 "치사해 진짜 꿈 도둑도 모자라 밥 도둑까지"(madreal01)라고 개탄했다. 'dydg\*\*\*\*'는 "드라마 내용은 정의가 승리하는 내용, 만드는 이들이 하는 짓은 드라마 악역보다 더 비열... 참 아이러니"라며 "보조출연자 그거 때려치우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king\*\*\*\*'도 "억울하면 성공해야 해. 저런 일은 일찌감치 관두거나 접하지도 말라"고 거들었다.

기사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댓글도 많았다. 'hoti\*\*\*\*'는 "보조출연자 호기심에 나간 적 있지만 식사 환경도, 휴식시간도 열악하다"며 "한달만 일하면 사회에서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joh2212'도 "누가 보조출연 해볼까 한다면 말리고 싶다"며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반장 비위에 거슬리면 다음부터는 출연을 못 하기 때문에 감정 없는 좀비가 돼버린다"고 했다.

'yang\*\*\*\*'는 '자매의 자살'(10 월 21 일치) 편에서 "오랫동안 굶고 굶은 연예계의 관행과 실상이 아주 조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rhdn\*\*\*\*'은 "2 년 동안 보조출연 했었는데 21 살 때 31 살 반장한테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그때 아무 일 없는 건 다행인데 반장이 친한 언니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고백했다.

'leca\*\*\*\*'는 "기사다운 기사에 후련하지만 씁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을 이슈화시켜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제도 자체를 시급히 뿌리째 바꾸어놓아야 한다"고 적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10 월 24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8453.html>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창조 경제' 대통령의 허상을 밝혀라  
활동 기록 2013/10/31 14:56.14

###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창조 경제' 대통령의 허상을 밝혀라

윤석열 공박, 전교조 탄압, 서청원 공천 등 '창조' 역주행  
신설된 70 여개 '창조부대' 실상 면밀하게 취재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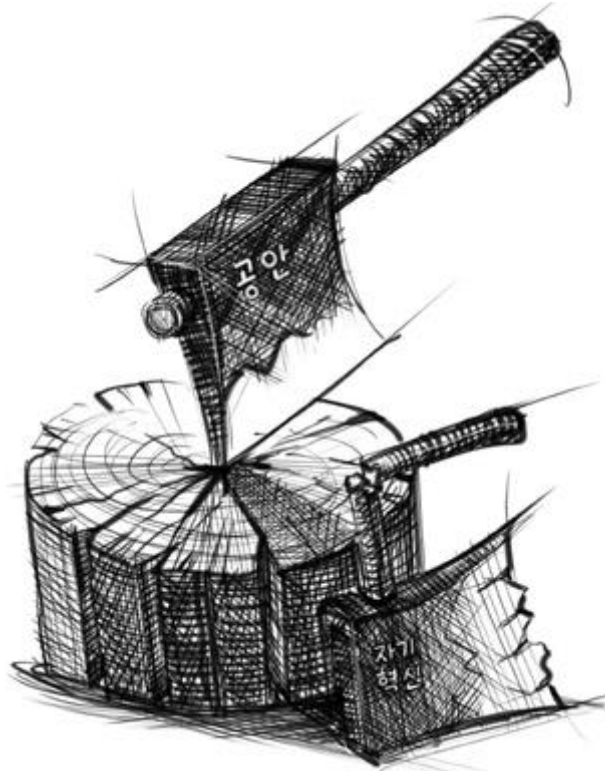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창조'와 열애중인 터다. 그의 창조론은 주요 모임의 단골 메뉴다. 그것도 경제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창조 사랑은 어느새 국경을 넘었다. 외교 무대에서도 그는 창조론을 열정적으로 설파한다.

관료들은 역시 잽싸게 호응한다. 20 개 모든 부처가 빠지지 않고 '창조' '창의' 부서를 신설했다. 70 개가 넘는 '창조부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 병무청, 농촌진흥청도 그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명령만 떨어지면 진격할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문제는 공격 목표가 없다는 데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가 맹공을 당했다. "내용이 모호하다."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이나?" 질타의 소리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명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주무 장관은 찢찢맷다. 장관 탓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국정 지표로 삼고 있는 박 대통령 스스로 창조경제에 대한 확신에 찬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터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의 창조론을 내팽개칠 일인가. 곱씹어볼 구석이 있다. 창조정신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매력적인 터다. 문명이 인류 독창성의 산물이듯, 오늘의 난제를 푸는 데도 창조정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일자리, 복지, 제자리걸음 성장, 양극화 문제를 어찌 이론이나 말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한성장을 꿈꾸다 한계에 부딪친 듯,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한 자본주의 체제 역시 창조적 변신을 통해 그 활로를 열어나갈 수밖에 없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mailto:kimyh@hani.co.kr)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이 충분히 영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다만 그 취지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따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발상의 전환, 새 산업의 창출, 생산성의 혁신, 창의적 사회 기풍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창조적 혁신을 통해 경제는 물론 국가 기반을 탈바꿈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 꿈을 누가 탓하랴. 다만 그 혁신은 지도자의 탁월한 통찰력과 헌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한다. 특히 역사적인 혁신의 성취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혁신'에 치열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갈고닦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다는 점에서 예외가 없다. 이승만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말썽 많은 유명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을 터.

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창조 시대'의 열쇠는 대통령 손안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는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새 시대는 참신한 사람, 새로운 기풍이 넘칠 때 절로 열리는 법. 낡은 사람이 판치고, 음울한 기운이 감도는 땅에서 결코 혁신은 꽃필 수 없다.

며칠 전 국감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국가권력의 무서운 폭력, 말로만 듣던 '권력의 꼭두각시' 검찰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길 잃은 권력이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뒤흔드는지를 그는 생생하게 보여줬다.

그나마 한 가닥 양심과 사명감이 검찰에 아직 남아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의 증언은 검찰 인생을 건 위험한 고백이었다. 그런데도 '하극상'이니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니 둘러대며 그를 공박하다니. 나라를 지키라는 권력이 되레 나라를 뒤흔드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눈감다니.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 장면은 비겁하고 비열했다.

이 엄중한 사태에 '창조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보기 드문 '혁신의 싹'을 어찌 두고만 보는가. 뜨겁게 포옹하고 격려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수사를 방해한 법무장관과 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는 용단을 선보일 때 아닌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낡은 부대엔 '시대의 찌꺼기'가 남아 있기 마련이다. 그 찌꺼기의 물결이 넘실대는 것도 박근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서청원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전이 한창이다. 공천 과정에 말이 많았다. "정치자금 비리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천하면 국민과의 약속 원칙을 저버린 셈이다." 새누리당 소장파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맥없이 스러졌다. '친박'에 '거물의 당선 가능성'을 앞세워, 진지한 반대 목소리를 찾잔 속에 가두고 말았다.

서청원 전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더불어 '흘러간 물의 귀환'을 상징한다. '콘스탄티누스' 국사편찬위원장 역시 새로운 기운을 내뿜는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주요 공기업 사장에 기용한 것도 새로운 기풍을 죽이는 독소로 작용할 법하다. 첫 내각부터 드러난 박 대통령의 '밀봉 인사' 스타일, 그것도 자질과 도덕적 흠결에 너그러운 태도는 폭넓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고용노동부의 처사 뒤에는 정치적인 판단과 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획일성과 통제를 거부하는 전교조가 권력엔 눈엣가시일 게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교육은 창조성의 요람이다. 그 창조성은 개방성과 다양성 위에서 활짝 핀다. 노동부의 통제는 국제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해직교사의 항변을 듣는가. "학생들 인권 지키려다 파면됐는데 정부의 전교조 탈퇴 강요 공정한가." 노동부는 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눈을 돌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책무에 전념할 일이다.

'창조경제'는 절실한 시대의 과제다. 그 밑그림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지난한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 좀더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철학과 헌신, 그리고 자기 혁신이다.

<한겨레> 역시 창조경제의 허상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말과 문서상'의 명쾌한 밑그림에 관심을 집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70 여개 '창조부대'의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솔직한 진술은 '창조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창조경제의 성공 가능성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 이 칼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한겨레> 2013 년 10 월 24 일자, 18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8454.html>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mailto: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11 월 8 일] 앞으로도 열심히 보도해 달라

독자 의견 2013/11/29 17:22.58

**[11 월 8 일] 앞으로도 열심히 보도해 달라**

한 여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와 "요즘 정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라며 개탄했다. 그는 "지상파 뉴스도 막장 드라마 같기만 하다"라며 "이런 답답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겨레'가 지금처럼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기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11 월 12 일] '넘사벽'과 같은 신조어 쓰지 말았으면

독자 의견 2013/11/29 17:23.08

**[11 월 12 일] '넘사벽'과 같은 신조어 쓰지 말았으면**

한 남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와 "신문 기사에서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러한 신조어를 쓰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와 같은 신조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넘사벽 (대중문화사전, 2009)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줄임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신의 무력감을 표현하기 위해 잘난 상대방을 두드러지게 과장해 보이는 경우 사용한다.

[11 월 15 일] '도청'감청' 관련 기사 실어 달라

독자 의견 2013/11/29 17:23.15

**[11 월 15 일] '도청'감청' 관련 기사 실어 달라**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요즘 '도청'이나 '감청' 등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많다"며 "'한겨레'가 이와 관련된 기획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스마트폰 전원을 꺼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소문도 있다"며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가려주는 정확한 기사를 내 달라"고 말했다.

[11 월 18 일] 음력 날짜도 표기해 달라

독자 의견 2013/11/29 17:23.22

**[11 월 18 일] 음력 날짜도 표기해 달라**

한 남성 독자가 전화해 "신문 지면 상단에 양력 날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음력 표기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1 월 19 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

독자 의견 2013/11/29 17:24.30

**[11 월 19 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

광주 광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35 면 '이희재의 세상수첩-김장을 하며'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그는 "그림 설명을 보면 배춧값이 떨어졌지만, 고추랑 젓갈값은 만만찮다고 나와 있다"며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짓는 내가 판단하기에 고춧값 역시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썼겠지만, 내가 아는 사실과 달라 혼란이 생긴다"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11 월 20 일] 제호 '한겨레' 좀 더 널리 알려야

독자 의견 2013/11/29 17:24.38

**[11 월 20 일] 제호 '한겨레' 좀 더 널리 알려야**

한겨레 애독자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한겨레'의 제호를 '한겨레 신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 같다"며 "미디어 그룹으로 상징성을 갖는 '한겨레'라는 제호를 좀 더 널리 알릴 수단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11 월 26 일] '종북'의 기준이 무엇인가

독자 의견 2013/11/29 17:24.46

### [11 월 26 일] '종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종북'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뜻을 풀이하자면, 북한에 시중든다는 것"이라며 "비리와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것이 이러한 뜻과 통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국민들의 생각마저 단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한겨레'가 나서서 '종북'이라는 단어의 폐해를 없애달라"고 말했다.

[11 월 27 일] 성 소수자 바라보는 시선 바뀌야  
독자 의견 2013/11/29 17:24.58

### [11 월 27 일] 성 소수자 바라보는 시선 바뀌야

고등학생 남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이 보통 성 소수자를 다룰 때, 가정환경 탓으로 돌리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한다"며 "진보적인 관점에서 다루더라도 약자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정도에 머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겨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이라며 "나도 성 소수자이지만 충분히 행복하다. 성 소수자 스스로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기사를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독자 의견]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 안 돼  
활동 기록 2013/11/29 17:25.04

### [독자 의견]

####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 안 돼

경제·IT 기사를 유심히 읽는다는 여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20 일치 18 면 '갤럭시 기어 올 100 만대 판매 예상, 퍼스트 무버 신화 삼성전자 일궈낼까'를 비판했다. 그는 "신화를 들먹이는 제목부터 거북하다"며 "삼성 직원이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엇갈린 반응이 오가는 제품에 대해 사실을 배제한 채 균형을 잃고 장점만 나열한 것도 <한겨레>와 어울리지 않는 보도 행태"라고 지적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 년 11 월 29 일자, 33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3162.html>

[독자 의견] 징역 10년 중형? 국민 법감정과 달라  
활동 기록 2013/11/29 17:25:11

### [독자 의견]

#### 징역 10년 중형? 국민 법감정과 달라

27일 한 남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소금물을 먹이는 등 학대하여 자녀를 죽인 계모에게 징역 10년은 중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2일치 10면 '자녀 학대 부모들에 중형 잇따라' 기사 등을 예로 들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법부의 중형 기준을 <한겨레>가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공론화해 기획 기사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11월 29일자, 33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3163.html>

[댓글 중계] "비정상적 사회 속에서 인권은 체념한 지 오래"  
활동 기록 2013/11/29 17:25:18

### [댓글 중계]

"비정상적 사회 속에서 인권은 체념한 지 오래"

"서비스업 스트레스 상상 초월"...'죄송' 입에 달고 사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가 받는 심리적 충격을 '질식', '트라우마', '마비', '소진', '비굴' 등 징후에 따라 연재한 '감정노동' 시리즈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모니터 요원(미스터리 쇼퍼)을 '진상 고객'으로 가장해 직원을 시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디 '시계바늘'은 "아빠가 회사 일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며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썼다. '미스트'도 "회사가 나서서 막아줘야지. 직원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 하게 감시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개탄했다.

'hyde\*\*\*\*'는 "거의 모든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지만 서비스업은 스트레스 상상초월. 매일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100명은 기본으로 상대하니까"라고 평가했고, 'guan\*\*\*\*'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남의 돈 버는 게 쉽겠냐 하면서 합리화한다"고 일갈했다. '바보천사'는 "서비스업에 있던 친구가 피드백(고객 만족도 평가)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10점이라고 말해달란다. 9점은 0점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며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헤아렸다.



'verr\*\*\*\*'는 "대학 졸업반 방학 때 백화점서 직원으로 1년 일하며 우울증 증세를 겪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죄송하단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고 회고했다. 'octa\*\*\*\*'는 "진상 짓에 매너 있게 대하라는 비정상적 사회 속에서 인권은 체념한 지 오래"라며 "감정노동자 10년. 아이 때문에 휴직했는데 내년 복직,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이런 기분일까 싶다"고 썼다.

'luxtella'는 "약간의 힘의 불균형만 있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며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도 돌아올 텐데"라고 적었다. 'st\_c\*\*\*\*'는 "집단 상담 시스템이 많았으면 한다. 내 감정이 얼마나 망가진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 진짜 불행"이라며 "심리상담치료자와 여러 비슷한 대상자들 간의 대화가 한국같이 자살률 높은 사회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11월 29일자, 33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3164.html>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거짓의 시대

활동 기록 2013/11/29 17:25.25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거짓의 시대

**'야만의 시대' 근본적 물음 던진 박창신 신부에 용단폭격  
막힌 언론의 치유 위해 한겨레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지난 주말 오후, 종편 채널 화면은 뜨거웠다. 이른바 '시사평론가'들이 박창신 신부에게 용단폭격을 퍼붓고 있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의 조국은 어디인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언급된 그의 강론이 문제였다.

조선일보는 이미 1면 머리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터였다. 제목도 자극적이었다. 'NLL 서한미훈련하면 싸야죠, 그것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사제들의 시국미사를 다룬 뉴스였다.



새누리당도 때를 만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재빨리 '중복구현사제단'의 꼬리표를 들고나와 '대통령 사퇴 요구' 뒤집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시국미사의 핵심 메시지, '박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한 대꾸는 한마디도 없었다. 정홍원 총리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가세했다. 검찰은 '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박 신부가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사태의 전말이 궁금했다. 내심 안타깝기도 했다. "도대체 왜, 굳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실연인가, 아니면 혹시 노신부님의 '노망기' 탓?"

<한겨레>를 보아도 박 신부의 '북한 옹호' 발언 진상을 가늠키 어려웠다. 결국 답은 인터넷에서 찾았다. 강론의 전문과 인터넷방송 <팩트>가 시국미사 전 과정을 담아 올려놓은 동영상도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신부는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의 만행을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야만의 시대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따름이었다. “전쟁이냐, 평화냐. 남북의 갈등이냐, 화해·협력이냐. 이 시대에 ‘종북몰이’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신부는 달을 가리키는데 ‘당정청’과 ‘조중동’은 신부님 손가락에 묻은 티끌을 놓고 ‘콩이니 팔이니’ 입방아를 찧고 있다니.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을 비유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서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그러나 강론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강박하게 대립하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취지의 것이었다. 더구나 박 신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엔엘엘(NLL) 논란’의 부질없음을 잘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찍이 엔엘엘의 성격과 국제법상 지위를 명료하게 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18일치 ‘뉴스 초점’에서 말했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국방장관의) 답변은 맞는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1999년 6월 11일치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제하의 기사에서 못박았다. “국제법상 영해란 어디까지나 특정 주권 국가가 3마일 또는 12마일 범위에 설정하고 만약 주변 국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인정하는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면, NLL 이남은 영해는 아니다.”

‘작은 산술’이 난무하는 세상의 아이러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권 출범 1년 황금기를 허송하는데 앞장선 언론의 해설기사였다니. 얼마나 명쾌한 설명인가. 박근혜 시대 불행의 단초가 ‘거짓과 위선의 언어 체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정쟁 대신 민생을.’ 박근혜 어록 첫 장의 기록이다. 그러나 그는 정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동문서답’으로.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은 나와 무관하다.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믿는다. (시국미사 관련) 국론 분열 행위 목과하지 않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가져오세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뇌와 결단의 흔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래로 잘도 흐른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며 내놓은 정부 설명은 아무래도 궁색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들먹일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거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데, 수사에 전념하는 검사를 내치며 징계까지 하는 것은 또 뭔가.

이 야만의 시대 웃음거리는 민주당의 쫓대 없는 행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당정청'과 '조중동'이 합세해 신부를 맹공하자, '신부의 연평도·엔엘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꿈무늬를 뺐다. 민주당의 비겁성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공세에서도 엿보였다.

민주당은 '똥 싼 놈의 큰소리' 앞에서도 엉거주춤한 모습이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선거부정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면서도 간간이 공세를 취하곤 했다.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민주당은 그때마다 아니라고 손사래 치기에만 바빴다. 한때 기세 좋게 종편 출연을 거부하던 민주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진정성 결여된 프로그램 만들기에 참여하고 나섰다. 그 모습은 '영혼 없는' 민주당을 상징한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거짓의 시대, '물구나무선 말'의 압권은 '언론이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신부들을 비판하는 데 쓰인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신부들이 나섰겠는가. 박 정권의 오만과 위선이 도를 넘은 것이 출발점임은 물론이다. 정작 신부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따로 있다. 길 잃은 언론, '영혼 없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다.

그동안 깜박 잊어버린 일이 있다. 해직 언론인 문제다. 엠비(MB) 시절, 16 명의 언론인이 쫓겨났다. 엠비시(MBC), 와이티엔(YTN) 등에서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인사들이다. 이명박 시절 전두환 정권 이후 언론인 탄압이 가장 강력했다. 거짓의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이들의 원상회복은 절실한 과제다.

<한겨레>조차 해직언론인 문제에 무관심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이 궁금한가? "이명박 시대의 문제는 나와 무관하다.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 해결하세요."

<한겨레>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요.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 이 칼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2013.12 독자 의견] 의료 민영화 방관할 건가

활동 기록 2014/01/03 17:26.19

**[독자 의견]**

**의료 민영화 방관할 건가**

17 일 한 여성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의료 민영화를 다루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항의했다. 그는 "의료야말로 철도만큼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인데, 중심 의제로서 1면에 연일 크게 실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집지고 방관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12월 27일자, 29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7174.html>

[2013.12 독자 의견] 독도 문제 꾸준히 공론화해야  
활동 기록 2014/01/03 17:27.25

#### [독자 의견]

#### 독도 문제 꾸준히 공론화해야

한 여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 12일치 6면 '일, 한국어판 독도 동영상 유포' 기사를 읽었다며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거짓 동영상을 버젓이 만들어 퍼뜨리는 일본 외무성의 행태를 두고만 볼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겨레>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지면 기사뿐 아니라 인터넷 '한겨레티브이(TV)'에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등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도 문제를 꾸준히 공론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3년 12월 27일자, 29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7175.html>

[2013.12 댓글 중계] 읽는 내내 눈물났던 '인터섹슈얼' 김씨의 사연  
활동 기록 2014/01/03 17:30.45

#### [댓글 중계]

읽는 내내 눈물났던 '인터섹슈얼' 김씨의 사연  
나와 다른 가치를 인정하는 일, 힘들지만 중요해

남녀 두 개의 성을 동시에 가진 '인터섹슈얼' 김래연씨의 사연을 다룬 7일치 15면 '지렁이가

아니라, 저는 사람이에요' 토요판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특히 김씨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용기 있게 인터뷰를 한 데 응원이 쏟아졌다. 'nine\*\*\*\*'은 "나비 중 반은 수컷이고 반은 암컷인 자웅모자이크가 있다. 누구나 다 그걸 나비라고 한다"며 "남성과 여성이 한 몸에 있다 해도 그는 당연히 사람"이라고 적었다.

'xell\*\*\*\*'이 "가족조차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자, 'saida'는 "받아들이는 게 머리로는 쉬워도 지나온 세월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pia'는 "당신의 사연으로 숨어 지내는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터섹슈얼'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고, 흥미로워 긴 글을 정독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Stellar'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험해본 적 없는 사실인데 쉽게 잘 써서 공감이 간다"고 했고, '20al\*\*\*\*'은 "(관련) 지식이 없었고, 기피 대상인 듯 겁이 났었는데 읽는 내내 눈물이 났다"고 썼다.

"저런 분들이 존중받으려면 정확한 개념을 어릴 적부터 배워야"(mimi\*\*\*\*)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서서히 공론화해야"(drea\*\*\*\*)라고도 지적했다. 'pioneer131'은 "성기 중심적인 성별 구분은 한계가 있다"며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를 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적었다.

'기쁨과눈물'이 "독일은 대단한 나라. 본인의 몸에 대해 결정권 행사할 때까지 제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고 감탄하자, '내초리'는 "(우리나라도) 수술을 원할 시 지원해주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성별을 바꾸어주거나 제 3의 성별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길"이라고 염원했다.

'qkrt\*\*\*\*'는 "<한겨레> 기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을 따뜻하고도 이성적인 눈으로 쳐다본다"고 칭찬했고, 'seen\*\*\*\*'은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분명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라며 공감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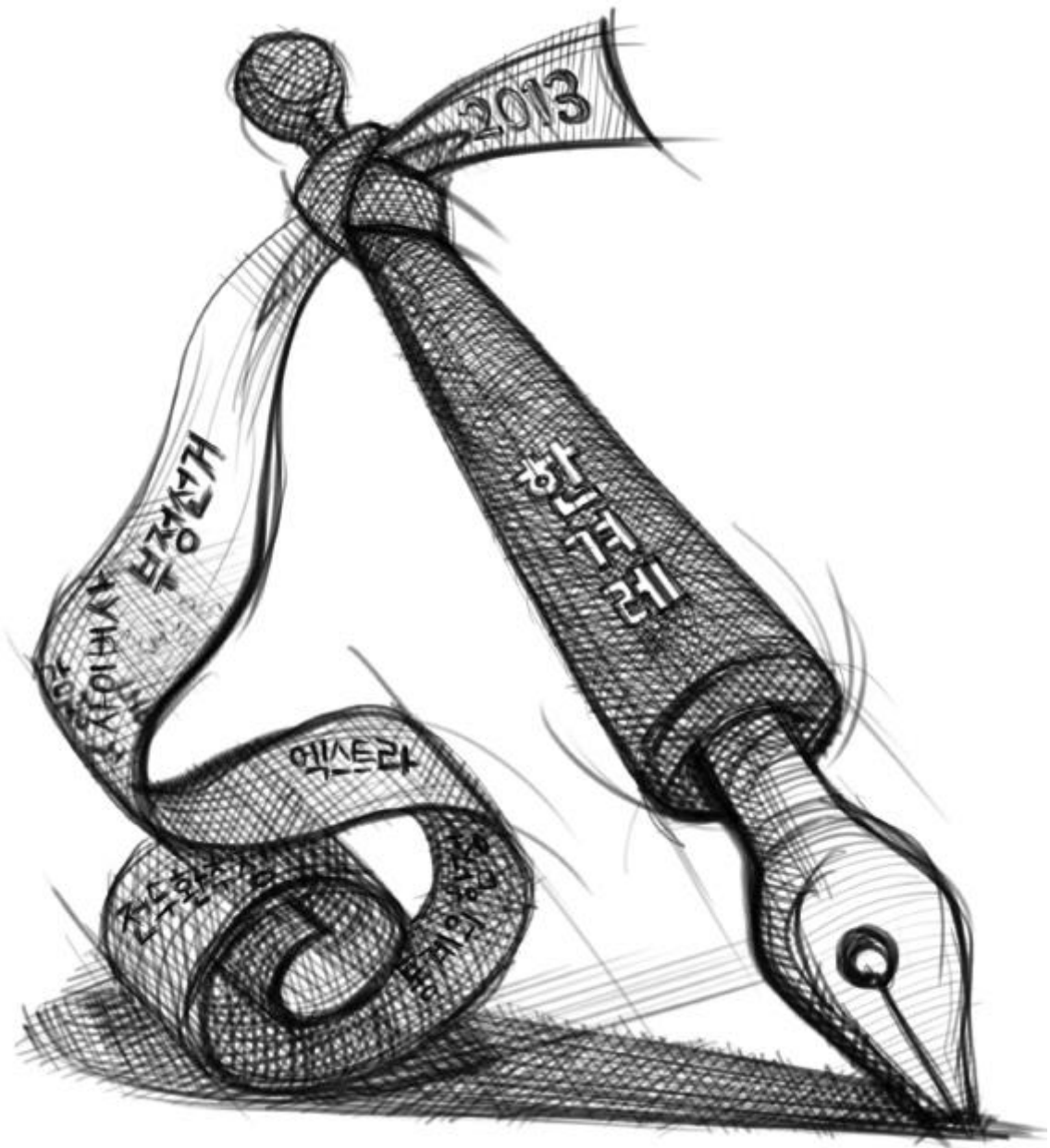
<한겨레> 2013 년 12 월 27 일자, 29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7173.html>

[2013.12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한겨레>는 아직 희망이다

활동 기록 2014/01/03 17:33.16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한겨레>는 아직 희망이다**



### 시민편집인의 눈

국가기관 대선개입·전두환 재산추적 보도 등을 한해 노력 돋보  
제 2의 유신시대 펼쳐지는 상황, 새롭게 '세상 바꾸기'에 나설 때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그 시대는 어두웠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와 헌법에만 존재했다. 언론은 제 목소리를 잇은 지 오래였다. '안녕'은 권력과 그 주변의 전유물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 폭압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25년 전 <한겨레> 창간 시절의 이야기다. 그 열망 속에 태어난 <한겨레>는 시민들의 믿음에 화답했다. 지면은 거칠었지만, 활기가 넘쳤다. 광고 탄압, 논설고문 구속 등 갖은 억압에도 굽히지 않았다. '세상을 바꿔보자.' 그 다짐과 믿음은 <한겨레> 공동체 안에 넘쳤다. 그 순수한 열정은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고,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한몫했다.

30년 군부정권이 막을 내리고, 시민들은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도 경험했다. 언론도 눈에 보이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한때는 언론의 조직적인 공세에 정권이 시달릴 정도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세상은 돌고 돌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아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국이다. '제2의 유신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탄식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순리가 사라졌다. 염치도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제왕이다. 그 신하들은 왕 앞에서 바른말을 꺼내지 못한다. '법과 원칙'은 백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약자를 탄압하는 도구로만 쓰인다. 정권과 한 몸이 된 언론은 '나팔수'로 되돌아갔다. 서민 살림살이는

딱딱하다. 사람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은 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꿈꿀 겨를이 없다.

<한겨레>가 다시 한 번 '세상 바꾸기'에 나설 때다.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은 <한겨레>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새삼 창간정신을 곱씹어 볼 일이다. 세월의 더께를 걷어내려는 노력도 필요할 터. 독자들은 다소 무디어진 필봉을 걱정한다. '기계적 중립'의 오류, '조종동' 닳아가기 등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겨레>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시민들의 신뢰도와 기대치가 높다는 점은 축복이다. 올 한해 지면을 살펴보았다.

<한겨레>는 올해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그 백미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 의혹 보도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1년 남짓 동안 양파 껍질 벗기듯, 부정의 전모를 파헤쳐간 끈질긴 추적이 돋보였다. 한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문힐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주도한 '헌정유린' 음모를 캐냈다.

그 과정에서 거둔 가외 성과도 옹골쳤다. 국가기관의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불감증, 집권여당의 무능과 무소신, 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수사 훼방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실체를 가늠케 하는 데도 <한겨레>는 한몫했다. 대통령은 단호히 대국민사과조차 거부했지만, 그것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억지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옹고집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진실에 접근하려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갈아치운 건 부질없는 일이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인 것을.

끝내 천주교 사제들이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은 물론 불행이다. 이는 <한겨레>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아이러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진통이다. 요즘 '안녕' 열풍도 부조리한 세상에 눈감는 언론에 대한 안타까움의 다른 표현 아닌가.

군 사이버사령부 등 또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행위도 <한겨레>가 밝혀냈다.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대선에 악용한 '범법' 역시 거대한 음모의 한 가닥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 거대한 퍼즐 풀기 과제가 <한겨레>에 던져진 셈이다. 그 '짜라시'가 궁금하다. 그런 짜라시가 존재할 개연성이라도 있는가. 집권당 실력자의 열토당토않은 변명에 거대한 음모의 답이 숨어 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는 아직 진행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환수케 한 공도 결코 작지 않다. 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가진 게 '29 만원뿐인 노숙자'의 지갑에서 1500 억원이 넘는 거금을 끌어낸 것이다. 아직 '법과 원칙, 정의'가 사멸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한겨레>의 열정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특별취재팀은 5 월부터 9 월까지 집요하게 은닉재산에 매달렸다. 그들은 전두환 일가의 재산목록과 등기부 등본,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과 제보, 내란음모 사건 수사 검사와 주변 인물 등 방대한 자료와 인맥의 산과 씨름했다. 검은 베일도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전두환 추징법' 여야 합의,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완납계획서 제출로 이어졌다. 이 특별취재는 독자와 시민을 참여시킨 '클라우드소싱' 실험의 개가였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감정노동'의 애환에 주목한 '마음을 짓밟는 감정노동' 시리즈,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비인간적 일터를 다룬 '엑스트라 쥐어짜는 드라마 왕국'도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감정노동' 시리즈는 현대노동의 또다른 세계를 조명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감정노동의 폐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법하다. 기업, 노동계 모두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신선한 기획물이었다.

'엑스트라' 시리즈는 엑스트라의 숨결까지 전달되는 생생한 기사였다. 잠입취재 열정이 뜨겁게 느껴졌다. 몇 년 전 취재원과 '짜장면 약속'을 지킨 기자정신도 정겹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다운 배려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기자의 시선이 따사롭다.

'권력에 춤추는 통계' 시리즈는 보도에 등장하는 숫자가 어떻게 생명력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줬다. 과학성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숫자의 허구, 통계의 함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다. 한 제보를 지렛대 삼아, 권력이 통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실태를 심층적으로 접근한 점이 돋보인다.

언론이 한 시대의 '사회 안녕'을 주도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물론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다. 2014년 <한겨레>의 활약이 자못 기대된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한겨레> 2013년 12월 27일자, 29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7176.html>

---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2014.1 독자 의견] 초미세먼지, 예보에 그쳐선 안 돼  
활동 기록 2014/02/05 14:50.44

### [독자 의견]

#### 초미세먼지, 예보에 그쳐선 안 돼

20 일 한 남성독자가 전화를 걸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신문과 방송의 보도가 예보에만 그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수치를 세세히 알려주고,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응책을 꾸준히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겨레>가 지난해 사실과 기사에서 중국과의 협약 문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점은 좋았다"면서도 "그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렇다 할 기사가 없어서 아쉽다"며 분발해달라고 부탁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4 년 1 월 24 일자, 29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1137.html>

[2014.1 독자 의견] 고등학생 목소리 담아야  
활동 기록 2014/02/05 14:52.47

### [독자 의견]

#### 고등학생 목소리 담아야

한 고등학생 독자가 9 일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전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이번 교학사 교과서 보도를 유심히 지켜봤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가 있다면, 앞으로도 이를 밝히고 걸러내는 데 <한겨레>가 꾸준히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생들이 교과서 집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관해 함께 제작하고, 직접 교과서를 선택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나와 같은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4년 1월 24일자, 29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1136.html>

[2014.1 댓글 중계] '아이들도 쉽게 하는 결제' 일부러 방관하나  
활동 기록 2014/02/05 14:55:28

[댓글 중계]

'아이들도 쉽게 하는 결제' 일부러 방관하나

'보호자 과실' 있지만,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의문도

'미성년자 결제' 등의 모바일 결제 피해사례를 다룬 16일치 17면 '아이가 스마트폰 만지더니...1720만원 요금 날벼락'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특히 구글의 허술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디 '피리부는사나이'는 "(구글 안드로이드는) 결제도 오픈형이고 조정절차도 오픈형"이라며 "소비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kkad\*\*\*\*'는 "20개월 된 우리 아이도 아무거나 막 눌러 15만원 결제했다"며 "아이들도 쉽게 하는 결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썼다. '전민준'은 "5살 아들이 할머니 폰으로 15만원 결제해서 구글에 비번 설정을 기본옵션으로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더니 상담원이 '저희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개탄했다. '연안부두'도 "비밀번호도 안 물어보고 클릭만 하면 돈이 결제된다"며 "뒤늦게 구글에 전화하면 그제야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알려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1720만원 결제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자 탓'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wjmk\*\*\*\*'가 "1720만원 결제할 수 있는 건 한도 좋은 신용카드뿐이고, 그게 법인카드였으면 관리 못 한 보호자 과실"이라고 쓰자, '코우키'도 "요즘 6학년이면 영악해서 알 거 다 알 텐데, 어려서 몰랐다고 환불해달라 말하기도 그러네"라고 적었다.

이에 '사랑'은 "가족 여행 갔다 할아버지가 손주 심심하다고 휴대폰 갖고 놀라고 해서 20만원 나왔다"며 "부모가 잘 알고 대처하면 좋겠지만, 수십만원씩 결제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brov\*\*\*\*'도 "댓글들의 화두가 빛나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상한 결제구조와 게임사들의 코 묻은 돈 욕심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디드릿도'는 "도난 등으로 요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안 막아둔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perrosono764'는 "구글이나 게임업체는 폰에서 돈이 결제되어 나갈 때마다 카드 본인의 동의를 받는 장치를 마련해



났어야"라고 썼으며, 'knyonG'가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난 이게 제일 이상!"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한겨레> 2014 년 1 월 24 일자, 29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1135.html>

[2014.1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여론조사 정치'의 함정  
활동 기록 2014/02/05 14:59.54

[2014.1 옴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여론조사 정치'의 함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다보스/연합뉴스

[시민편집인의 눈] '여론조사 정치'의 함정

박 대통령 지지도 조사 17%만 응답...83%의 생각 반영 안 돼  
'허상'이 지배하는 정치는 위험...'한겨레'가 주목해야 할 대목

무척 궁금했다.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일까. 취임 이후 박 정권은 줄곧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터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먹통정권',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부도정권', 창조적 기풍보다는 40년 전 '유신'의 기운이 감도는 '복고정권', 성직자의 진지한 충고에도 '종북 딱지' 붙이기 마다하지 않는 '종북정권', 법과 원칙을 외치며 민주노총과 언론사를 유린한 '무법정권'에 대한 평가라니 놀랍지 아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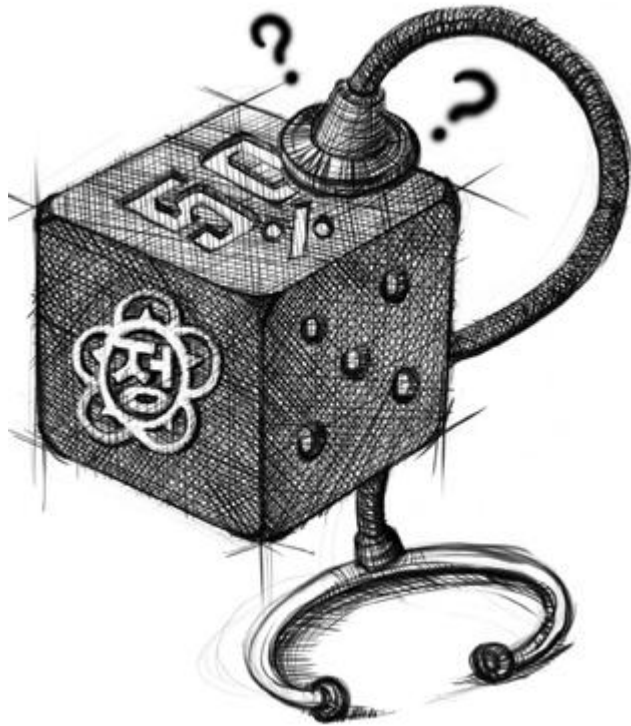
여론조사는 어느새 정치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거엔 여론조사가 위력을 떨친다.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전 판세를 읽는 데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오차범위' 이내 살얼음판 대선 결과를 즉집게처럼 짚어내는 '출구조사'는 이미 몇 차례 감탄을 자아낸 바 있다.

그뿐인가. 미래의 정치도 여론조사가 '점지'한다. 안철수는 여론조사가 잉태한 '새 정치의 메시아'다. 바야흐로 정치행위는 여론조사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판받는 시대다. 백성들의 아우성에 꿈쩍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 믿는 구석도 여론조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 허실을 점검해 볼 필요를 느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를 만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임상렬 대표로부터, 여론조사 과정과 그 과학적 의미, 언론 보도의 문제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론조사는 통계학이 빚어낸 과학적 산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통계학은 극소수 '표본'의 생각에서 거대한 '모집단'의 생각을 유추해 낸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적절한 표본과 설문, 인터뷰 방식, 정교한 과학적 분석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적절한 표본 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디지털 문명은 세대 간에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연출한다. 연령대에 따라 소통의 수단과 방식이 다양한 터다. 일부 젊은층에선 여론조사 기관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업계는 새로운 '표본의 풀(표본 집단)'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과 경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터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지난 대선 때 유권자는 4000 만명을 돌파했다. 요즘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표본은 대체로 1000 명 남짓이다.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1000 명이 4000 만명의 생각을 대변하는 셈이다. 하물며 표본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여론조사는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겠는가.

낮은 응답률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최근 언론에 공표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자릿수 응답률도 심심찮게 발견될 지경이다. 참고로 일본의 최근 사례를 찾아보았다. 지난 연말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60%를 넘었다. 미국 언론은 응답률 30% 미만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임 대표는 “제한된 표본, 그것도 대표성이 결여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여론조사는 각각 ‘하나의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자체, 곧 ‘생산’의 문제보다는 언론 보도, 곧 ‘유통’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독자에 영합하는 데 이골이 난 언론이 ‘허상’을 ‘실체’인 양 보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겨레>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찾아보았다. 지난 11 일치 기사 '박 대통령 지지율 올랐지만...불통 이미지도 세졌다'의 주요 대목을 옮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새해 들어 상승했다.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지지율 관리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9 일 전국 성인 1219 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회견과 설 특사 등을 통한 청와대의 지지율 관리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밝힌 이 조사의 응답률은 17%. 100 명 가운데 83 명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보도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사실'로 전하고 있다. 보도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전략과 인식의 세계도 함께 보여준다.

<한겨레> 편집국 임석규 정치·사회 에디터를 만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여론조사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가?

"오차는 있겠지만, 여론의 흐름을 읽는 데 유용한 과학적 지표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표본의 결함,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 등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한다. 낮은 응답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연구과제다."

-'허상'을 '실상'으로 호도하는 데 한몫 맡고 있다.

“보도에 신중할 필요성을 느낀다.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의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신뢰도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여론조사의 과학적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한겨레>는 특히 ‘정량조사’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정성조사’를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표적집단심층좌담회(FGD)가 대표적이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숫자의 마술’의 폐해는 크다. 박 대통령의 오만도 대표적인 폐해의 하나로 꼽힌다. 새누리당의 기고만장과 민주당의 주눅 든 모습도 여론조사의 ‘집단최면’ 효과로 보인다. 한국을 움직이는 핵심 정치집단의 ‘오판’은 나라의 장래를 그르칠 수 있다. 정치판이 정치판에 가득한 거짓과 위선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 솔선하는 대신 숫자놀음에 빠진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허상'이 지배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무릇 정치는 산술의 세계가 아니다. <한겨레>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한겨레> 2014 년 1 월 24 일자, 29 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1155.html>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mailto: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2014. 2 독자의견] 금메달로 매긴 순위 쓰지 말아야

활동 기록 2014/02/28 10:11.15

[독자의견] 금메달로 매긴 순위 쓰지 말아야

소치 겨울올림픽이 폐막한 24일, 한 남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 "올림픽을 보도할 때 금메달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 말고, 금·은·동메달을 모두 합해 낸 순위를 실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외국 언론들은 은메달과 동메달도, 금메달과 똑같이 대우해주자는 뜻에서 이러한 순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외국선수들이 동메달을 따고도 뿔 듯이 기뻐하는 것은 그 나라 언론이 모든 메달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가치 있는 시도를 '한겨레'가 제일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4. 2 독자의견] 지면에서 실종된 '국정원 댓글'

활동 기록 2014/02/28 10:13.45

[독자의견] 지면에서 실종된 '국정원 댓글'

21일 한 남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끈질기게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김연아에게는 두 면이나 통으로 할애하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종교계 활동은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독자는 25일 한 차례 더 전화해 "어제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시국미사를 했는데 역시 신문에 나오지 않았다"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한겨레>만이라도 꾸준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4. 2 댓글 중계]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면 성직자 아나  
활동 기록 2014/02/28 10:19.27

[댓글 중계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면 성직자 아나

#### **"진정한 종교인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

사제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의 인터뷰 기사(22일치 3-4면) "김용판 무죄 안타까워...정치 외면은 예수님의 길 아냐"에 1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근거 없는 비방이 주를 이뤘지만,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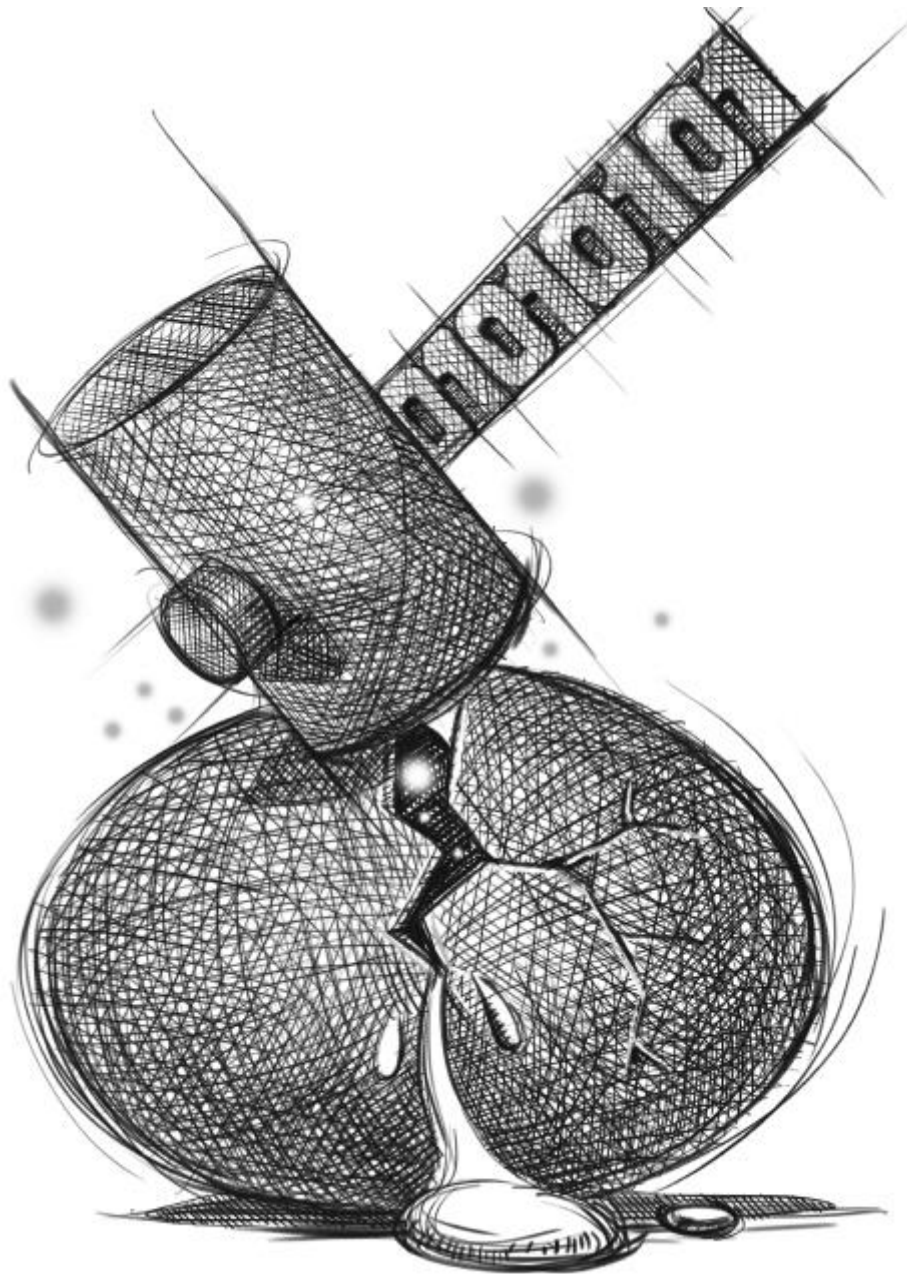
아이디 '김영미'가 "강우일 주교님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지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남긴 댓글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톱코멘트에 올랐다. 'sam10278'은 "진정한 성직자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성직자가) 권력자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강 주교를 지지했다. 또한 "불의를 목격하고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종박'도 "종교가 불의를 보고 그냥 있으면 죽은 신앙"이라고 썼다. 'Jay Shim'은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 지행합일의 정말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응원 댓글을 남겼고, '노영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반면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정기영'은 "신부나 스님이 잘못된 이념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떠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종교인이 신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걱정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도 있었다. '장군봉'은 "이런저런 종파가 정치에 참여해 친정부, 반정부로 나뉘고, 종교인들이 만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회를 상상하면 끔찍하다"고 적었고, 'kkh0820'은 "신,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라며 논점과 상관없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2014. 2 음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창조성의 적' 디지털 문명  
활동 기록 2014/02/28 10:28.53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시민편집인의 눈]

'당신의 디지털 안녕하십니까' 연중기획물은 가치 있는 시도  
'인간 창조성 산물이 정작 인간 상상력 저해' 초점 놓쳐 아쉬워

<한겨레>가 야심찬 연중기획물을 선보였다. '당신의 디지털, 안녕하십니까'가 그것이다. '디지털 강국' 한국은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고 있다. 무릇 문명의 이기는 인간에게 안락, 편리성과 함께 뜻밖의 부작용과 폐해도 불러오는 법. '디지털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집중 조명한 <한겨레>의 기획은 가치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올 신번호에 첫선을 보인 시리즈는 한 달 남짓 동안 매회 두 쪽씩, 10 회에 걸쳐 생활 속에 침투한 디지털 문명의 모습을 다양하게 추적 보도했다. 해외 현장 취재를 곁들여 '지구적 문제'에 대한 입체적 접근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시리즈는 아쉬움을 남겼다.

시리즈는 '중독'에 매몰돼 디지털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놓친 감이 있다. 디지털 문명에 대한 최대 쟁점을 빠뜨렸다. '인간 창조성의 산물인 디지털 문명이, 정작 인간의 상상력을 좀먹고 있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디지털 문명은 '창조적 직관'과 '사색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터다. 생각하는 동물의 상상력은 '사색'과 '여백'에서만 나래를 펼 수 있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생각' 없이 과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수들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논문을 손쉽게 표절하는 시대다. 디지털에 창조적 인류 문명의 '브레이크'가 숨겨져 있다는 통찰은 곱씹어 볼 대목이 아니겠는가.

12 살 때까지 디지털 기기에 노출시키지 않는 실리콘밸리 학교, 발도르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학교의 학부모 4 분의 3 이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한다. 그들이 느끼는 디지털의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어떤 고민과 과학적 근거로 아이들 보호에 나섰을까. 디지털 문명에 숨겨진 '독소'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기사는 '기업들 교묘한 마케팅'을 주제로 삼은 1 월 24 일치 일곱번째 시리즈에서 작은 보조상자로 처리됐을 뿐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 에스엔에스(SNS)의 눈부신 발전은 소통의 길을 무한히 넓혔지만 또다른 소외와 단절의 벽이 생성되면서 공동체의 파괴가 동시에 이뤄지는 아이러니도 디지털 문명의 속제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기술과 영혼 없는 상흔의 합작극을 '사람의 눈'으로 차분하게 점검해 볼 시점이다. 핵심 주제를 놓침으로써 기획의도는 빛이 바랬다.

기획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디지털 문명이 빚어낸 다양한 세태,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기업의 상흔 등을 다뤘지만 일관된 기획의도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상자들은 '친절'하게 다양한 구색을 갖췄지만, 그 내용은 도식적이었다. 기획 초점의 명확성, 집중력이 아쉬웠다.

시리즈를 이끈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 **-디지털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디지털은 기술이지만, 기존에 등장했던 여느 기술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혹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특성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만나 '늘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된 채 살게 하면서는 그 기술의 변화가 개인과 인간관계 깊숙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기술의 사용성에만 매혹되어 해당 기술이 인성과 관계에 대해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숙고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기기는 '유혹의 기술'로 아이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지만, '슬기로운 활용법'에 대한 연구는 더디다.**

“디지털 기술은 너무 매혹적이고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특히 뇌가 성장기에 있고 자기통제력이 형성되는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에게는 각별한 교육과 사용 지도가 필요하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학습과 감시에 나서는데 시급하다.”

**-디지털 문명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구·관리하는 국가기구, 법제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사랑은 유별나다. 새 기술을 성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무조건 빨리 받아들여 성장하고 보자는 문화가 풍미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학계, 언론계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러나 선부른 법제의 마련보다는 전문가와 사용자 집단,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는 게 우선이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창설 취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모색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탐구해나갈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은 전기나 자동차보다 덜 위험하지도 않고, 성인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란 점에서 더욱 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연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 문제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도 있다.”

**-기획 방향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편중됐다. 그 중독이 가져올 후유증의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중독이 가져오는 후유증 등 결과에 대해 조명하고 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지만, 이를 취재를 통해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그 중독의 결과를 입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각 현장에서의 경험과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수박 겉핥기 느낌이 들었다. 해외취재 내용도 심층성이 미흡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생생한 현장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력과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후속 시리즈 기획 방향은?**

“신년기획으로 시작한 ‘당신의 디지털, 안녕하십니까’ 1 부에 이어, 3 월에 2 부를 시작할 예정이다. 1 부에서 총론을 다루며 조망했다면, 2 부에서는 캠페인으로 들어가 디지털 부작용과 그 대처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와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을 동원해 디지털 고민상담 문답 코너와 디지털 기술의 구조 등을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2014. 3 음부즈맨-시민편집인의 눈] '진보 정신'은 인간적 따스함이다  
활동 기록 2014/03/28 10:16.18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시민편집인의 눈

독자들의 가슴 축축이 물들인 '세 모녀의 비극' 집중보도

보수-진보 틀 갇힌 민심읽기 답답...규제개혁 비판도 미흡

봄기운이 싱그럽다. 푸른빛 새싹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자연의 순리 앞에서 우리는 역사 발전의 길을 배운다. 무릇, 권력의 오만은 부조리와 모순을 낳고, 아무리 강고한 체제도 순결한 작은 열정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 곧 '진보주의'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한겨레>는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적 신문'이다. <한겨레>의 '진보성'이 '보수'가 지배하는 척박한 한국 언론 풍토에 새바람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솟는다. <한겨레>가 '진보'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진보-보수'의 틀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게 적절한 것인가.

'진보-보수의 틀'이 언론계에 제법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또는 갖가지 사회적 논란을 둘러싼 분석기사에서 이 틀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스스로 '진보지' '보수지'를 자처하거나 상대를 지칭하는 데 익숙하다. <한겨레>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보수지-진보지 타령'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언론의 부조리, 사회적 쟁점을 은폐·호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기대는 지극히 소박하다. 그들은 '일당 5 억원 노역'의 부조리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에게 '황제 노역'을 선사한 판검사의 자비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정당하게 사임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음모의 소산인가. 독자들의 궁금증은 간명하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원초적 감정의 표현이다. 정의는 언론이 쫓아야 할 으뜸 덕목이다. 거기엔 '보수' '진보'가 끼어들 틈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 부정' 역시 이념적 좌표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헌법 정신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를 누가 옹호할 수 있겠는가. 누가,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어떤 규모로 '부정'을 저지른 것인지 그 진상을 철저히 수사했는가. 그 사법처리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하기 짝이 없다.

민감한 이슈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이념적 틀에 맞춰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략적 집단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 실체가 궁금할 따름이다. 그들은 과연 내란을 음모한 것인가. 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정당했는가. '진실'을 능가하는 언론의 가치는 없다. 언론의 본령에 비춰볼 때, '보수' '진보'는 군더더기다.

물론 이념적 '취향'에 따라 보도방향이 엇갈릴 만한 사안도 없진 않다. 예컨대 제주 해군기지, 원전정책, 경제민주화, 복지의 기조 등이 그것이다. 저마다 다른 세계관, 철학적 통찰력과 무관하지 않은 터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 언론 풍토에서는 무의미하다.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에서 철학적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민심을 진보-보수의 틀에 비춰 읽어내는 방식도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선거 결과를 놓고 '보수화의 고착화' '젊은층의 보수화' 등을 기정사실화하곤 했다. 과연 적절한 판단일까. 선거에서 이념적 잣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일부 언론의 편파성, 종편의 권력 유착 등 현상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거짓에 찌든 언론문화의 독소는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 진보-보수의 틀 안에서, 거짓이 '신념과

철학'의 차이로 포장되기도 한다. <한겨레>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대신 진실의 전령사로서, 지면 자체의 생명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일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지난 2 월 28 일치 <한겨레>는 시민들 마음을 뒤흔들었다. 1 면 머리기사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벼랑끝 세 모녀의 비극'의 파장은 멀리 번졌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세 모녀의 참담한 사연에 독자들은 가슴 아파했다. 정치인, 행정당국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대통령까지 나서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자칫 사회면 구석에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한겨레>는 이 비극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복지 체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 경황 중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 만원을 집주인에게 남기다니.... <한겨레>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비춰 보여줬다. 많은 독자들에게 성찰의 계기가 됐음직하다. 이는 <한겨레>의 따뜻한 가슴이 남긴 선물이라고 이해한다.

그렇다. '진보정신'은 인간에 대한 따스함에 있다. <한겨레> 지면엔 논리적으로만 진보적인 측면도 엿보인다. 이런 현상은 노동·농민 등의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적어도 양적으로는 어느 매체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질적인 깊이까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노조를 결성할 힘도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의 현상이 조명되는 일은 거의 없다. 농민, 농촌, 농업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꽤 오래됐다.

<한겨레>의 진보성과 관련된 한 기자의 항변도 있다. 최근 한겨레신문사 '사내게시판'에 실린 글이다. 3 월 21 일치 1 면 머리기사 '박 대통령, 규제와의 전쟁 선포...결국 줄푸세로 회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옮긴다.

"기사는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지난 대선 때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강조하던 태도를 180 도 뒤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대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두 전문가의 코멘트도 '일반론'에 불과하고 논지가 모호하다. 박 대통령은 매우 교묘하고도 전략적으로 바둑돌을 놓고 있는데, 우리 지면은 자칫 '<한겨레>=진보=규제론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된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기자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그날의 '이벤트'에서 '여론조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방송 3사가 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시청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폭거'였다. 그 의도의 순수성은 의심받을 만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규제개혁 시책의 허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진 못했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스스로 '진보지'라고 일컫는 것은 어색하다. 지면 위에 진보적 신념을 차분하게 구현할 일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이 칼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2014. 3 댓글중계] '먹튀 회장님'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라

활동 기록 2014/03/28 10:20:32

**일당 5억원짜리 노역으로 벌금 대신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공분**

**'봐주기 판결'에 조롱 섞인 댓글 쏟아져**

수배 중에 외국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으로 벌금 249억을 대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18일치 단독기사 '먹튀 회장님 구치소 노역이 일당 5억?'에는 7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봐주기 판결'을 비꼬는 조롱 섞인 댓글이었다.

아이디 'Sanghoon Ryu'는 "조선 영조시대 때부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저 돈이 될 텐데 단



49 일 만에 벌다니, 역시 재벌은 비범한 인물이군요"라고 비꼬았다. 'glepdytlfjqm'도 "이런 신의 직장이 있었다니"라고 달았고, 'Dongsoo Yi'는 "우리 모두 49 일만 노역하면 재벌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누리꾼들의 한탄도 이어졌다. 'Tin Toy'는 벌금형 노역장 유치금액이 5 만원에서 10 만원으로 오른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소개하며 "10 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루 5 억으로 '통'치기도 한다"고 썼다. 또한 "언제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지나"라고 안타까워하며 "담당 판사가 생각하는 '평등'의 정의는 무엇이나"고 일갈했다. 'wjklfneweo'도 "동일 노동 다른 임금, 평등은 오간 데 없고..."라고 개탄했다.

허 전 회장이 노역장에서 이틀을 쉬고도 10 억을 탕감받았다는 후속 보도(‘먹튀 회장님, 노역장에서 이틀 쉬고도 벌금 10 억 탕감’)에도 누리꾼들의 촌철살인 댓글이 이어졌다. 'boogar'는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 한다"며 "백억대는 되어야 법이 머리를 조아린다"고 비꼬았다. 'cyb2001'이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일당 5 억원짜리 노역 판결을 내려달라"고 달자, '이상안'은 "정말 그래야 한다. 같은 인간으로 취급 받고 싶다"며 호응했다.

손지은 시민편집인실 차장

[2014. 3 독자 의견] 노인독자 대변할 '실버 편집위원' 있었으면

독자 의견 2014/03/28 10:17:59

**[노인독자 대변할 '실버 편집위원' 있었으면]**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5 차 회의 내용이 지면에 소개된 13 일, 70 대 남성 독자가 전화를 걸어 "일흔을 훌쩍 넘긴 내 눈에는 열린편집위원회가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노인세대를 대변할 '실버 편집위원'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노인만이 노인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세대보다는 더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손지은 시민편집인실 차장

쪽배로 25명 구할 때 해경은 무엇했나

활동 기록 2014/05/30 11:28:23

**댓글 중계**

쪽배로 25명 구할 때 해경은 무엇했나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쪽배를 몰아 25명의 생명을 구한 김현호 선장을 1박2일 동안 동행하며 쓴 26일치 단독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미 70도 이상 기운 세월호에 1.11t에 불과한 소형 어

선 '피시헌터'호를 몰고 구조에 나선 김 선장과 어민들을 향한 감사 댓글이 이어졌다. 아이디 'Evo\*\*\*\*'의 "저분들 아니었으면 그나마 지금 구조된 생존자 수마저 0이 될 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란 댓글이 126명의 추천을 받았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며 솔로 괴로움을 짓이겼다는 김 선장을 향해 '박반장'은 "당신이 진정 용기 있는 시민입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 그만 괴로워하시길..."이라며 위로했다.

이 기사에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해경이 2 차 피해를 막겠다며 민간 어선의 구조를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atr\*\*\*\*'는 "윗선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눈앞에 사람이 가라앉고 있으면 일단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반인도 구조하는데 해경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라며 개탄했다. 'gustm'은 "헬기에 경비함정, 고속함, 유디티(UDT)가 달랑 모터 하나 달린 1.11t 배보다 못하다니"라며 해경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이머꼬'는 "나라 위기 때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구했듯, 세월호 참사에도 역시나..."라고 적었다.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cool'은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들, 몸으로 나라를 지탱하는 이분을 본받으라"고 지적했고, 'Jun\*\*\*\*'는 "김 선장처럼 슬픔을 느끼거나 할까"라며 반문했다. 'pa\*\*\*\*'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봉급 많이 받으면 뭐하나. 공금 횡령하고 돈만 아는 사람보다 이런 마음 착한 어부 김현호씨가 많아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썼다.

세월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jk\*\*\*\*'은 "한 사람이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최건국'은 "정예 병력을 초기에 투입하고도 실적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캐내어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reen10'은 "사고 조사를 정부에 맡기면 은폐할 수 있다"며 "민간전문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시민편집인의 눈] '악어의 눈물'

활동 기록 2014/05/30 11:31.16

[시민편집인의 눈] '악어의 눈물'



**안대희 파동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적폐...언론 방조도 원인**

**KBS 틀어쥐고 놓지 않으려는 권력... '한겨레'가 적극 보도를**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19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정중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철의 여인'이 보인 뜻밖의 눈물이었다. 얼어붙은 민심도 녹아내릴 법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효과는 간 데 없다. '순결한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은 터였다. 그 눈물 이후 대통령의 행보는 그 눈물의 의미를 더욱 헛갈리게 한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거센 민심의 저항 앞에 무릎 꿇었다.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 설명과는 동떨어진, 적폐에 이미 깊숙이 발을 담근 인물이었다. 흠집을 축소해보려는 몸짓으로도 민심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나마 자신의 흠결을 인정하고 끝내 물러선 '염치'에 한줄기 위안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적폐를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가. 새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과연 고뇌와 결단의 산물인가. 대통령은 정녕, 갈기갈기 찢긴 민심을 어루만지고 보듬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인가.

'안대희 파동'은 청와대가 적폐의 본거지임을 입증하고 있다. 나라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없었다. 어떻게든 소나기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속셈만 드러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정성을 다해 책임자를 물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인물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에너지를 한데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뇌도 엿볼 수 없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거나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깊은 고려 없이 불쑥불쑥 내미는 대책도 해소돼야 할 적폐다. '해경 해체'는 상징적이다. 대통령은 절차를 뛰어넘어, 해경 해체를 기정사실화했다. 왜 해체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지도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 구조 과정에서 무능했던 해경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체에 따른 문제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 한마디 듣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자애로운 정을 느낄 수 없었다.

이 제약적 통치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두고두고 민심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기본'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와대가 마음먹고 철저하게 변신하면 정부 부처는 저절로 바뀌게 마련이다. 대통령은 적폐의 최고 책임자이자 그 적폐를 해소하는 열쇠의 소유자인 셈이다.

청와대 적폐는 '언론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은 사실 언론이 방조한 탓이다. 그 언론계에서 잇달아 나오는 '반성문'이 눈길을 끈다. <와이티엔>(YTN)과 <한국방송>(KBS)은 세월호 참극 과정에서의 '오보'와 불성실한 취재보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도 사실과 기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의 통제' 사실이 확인된 케이비에스 구성원들의 '울분'에 찬 사죄성명도 있었다.

언론계의 집단적인 움직임에서 희망의 싹을 본다.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의구심이 피어오른다. 우선 무엇을 반성하는지 궁금하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절망과 분노가 참사 관련 보도에 국한되었는가. '언론의 죽음'에 대한 성찰 없는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될 수 없다. 언론의 죽음이 가져온 황량한 현실을 냉정한 눈으로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언론이 공익 기능을 포기한 지 오래다. 언론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권력 감시의 눈초리는 둔해졌다. 권력기관의 헌법 유린행위가 가벼운 '일탈'로 치부되기도 한다. 옳고 그름보다는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정의에 대한 불감증은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은 상생의 정신과 배려보다는 치열한 경쟁에 익숙하다.

필자는 염치와 상식이 사라진 야만적 세태를, '언론의 죽음'이 야기한 현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진보'와 '보수'도 염치와 상식의 품 안에 존재한다. '매뉴얼'과 '제도'도 상식과 염치가 작동될 때 의미를 지닌다. 정의와 불의도 상식에서 출발한다. 터무니없는 '진보' '보수'의 틀에 꿰맞춰 세상일을 보도해온 죄는 없는지 먼저 반성하는 것도 언론의 도리다.

'몰상식'과 '몰염치'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권력은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른바 관피아는 '권력 사유화' 집단의 범주이다. 그동안 관피아는 적폐가 어느 정도 용인됐은 것은 사실이다. 이젠 명백한 '몰염치' 행위다.

'관행'과 '적폐'의 단맛을 지키려는 몸부림 역시 치열하게 펼쳐진다. 케이비에스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통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물러난 보도국장의 증언을 통해서다. 김환영 케이비에스 사장은 청와대 통제의 현장 지휘자였음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그 사장은 시청자 앞에 엎드려 사죄한 후 물러나는 게 상식이자 도리다. 사퇴를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그가 던지는 '적반하장'이 차라리 안스럽다. "좌파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사장 해임안 처리를 미룬 이사회도 상식을 저버렸다. 지방선거 이후로 해임안 처리가 늦춰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속셈이다. 그 알팍한 산술이 케이비에스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린다는 점은 왜 간과하는가.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케이비에스를 손아귀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알팍한 술수가 보인다. <한겨레>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케이비에스는 권력자의 것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는 범국민적 합의가 새삼 무르익고 있는 시점이다. 케이비에스 사태를 결코 강 건너 불 보듯 '중계방송'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극은 '언론의 죽음'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인들 사이에 그 공감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믿는다. <한겨레>의 결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흔들리는 나라의 기틀은 언론의 정상화를 통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다이빙벨 효과없다' 단정말고 추가취재 했으면

독자 의견 2014/05/30 11:29:30

#### 독자 의견

'다이빙벨 효과없다' 단정말고 추가취재 했으면

5월13일 5면에 실린 "정부가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 막았다?" 기사와 관련해 많은 전화가 왔다.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는 "다이빙벨이 효과 없다는 것을 왜 해경의 말을 통해 입증하냐"며 "<고발뉴스>에 다이빙벨의 효과가 생중계 됐는데 그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 중 '다이빙벨 투입 논란으로 수색에 모였어야 할 현장의 노력이 엉뚱한 곳에 허비됐다'는 내용에, 한 50대 남성 독자는 "개인 사비를 털어 생명을 구하고자 봉사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 노력마저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기사가 포함된 기획 '세월호 6가지 소문 사실 확인'과 관련해 한 독자는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데 단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hyori47@hani.co.kr

[시민편집인의 눈] '한겨레 생각'은 뭔가? / 고영재

활동 기록 2014/07/02 13:56.44

[시민편집인의 눈] '한겨레 생각'은 뭔가? / 고영재



**국가개조론·언론개혁·전관예우보다 몰염치한 현재 권력 등  
박근혜 정부 아래서 생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대응하길**

웃지 못할 일이다. 총리 후보자가 거둬 낙마했다. 그 자리는 이미 '흘러간 물이 거슬러 올라와'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폐'가 빚어낸 참사였다. 과거에 갇힌 박 대통령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젖었다.

세월호 참사 뒤,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하자'고 강조한 대통령이었다. '인사는 만사'가 결코 허튼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대통령 통치철학의 '그림자'인 터다. 무엇이 시대적 과제인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누가 책임자인지, 대통령의 인식과 전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한 치도 변함없는 '과거'를 고집했다.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도 '새 시대'에 걸맞지 않았다.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능동적으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도리였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법. 오늘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는 없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거듭 일깨워준 셈이다.

문제는 '세월호' '박근혜'가 곳곳에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적폐, 곧 '찌든 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쉽던가. 담배 쓴맛도 잊기 어렵거늘, 권력 휘두르는 달콤한 맛을 누가 포기하려 들겠는가.

언론은 특히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탠 또 다른 '박근혜'다.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정치의 '일등공신'은 언론이다. <한겨레>도 이 점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겨레>의 '생각'이 궁금했다. 새 시대를 위해서는 언론의 '혁명적 탈바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터다. 편집국장에게 '서면질문'을 보냈다. 질문지 내용은 독자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믿는다.

답은, 이 원고의 마감 전날 돌아왔다. 편집국 간부들과의 논의 끝에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편집국장의 말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 한겨레의 편향성을 비판하기도 하는 터에 조심스럽다.' 그 질문지를 거의 그대로 옮긴다. 독자들과 함께 '한겨레의 고뇌'를 곱씹어볼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극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 방향은 전방위적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두 갈래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정치권력과 정치문화의 혁파, 다른 하나는 사회 정화 기능을 상실한 언론의 재탄생입니다.

<한겨레>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한겨레>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국장의 육성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그리고 한겨레의 존재 의의를 다시금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과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꾸렸습니다. 교과서적인 모범답안보다는, 평범한 독자들이 읽기 편한(현장감이 느껴지는) 어법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은 다소 생뚱맞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믿어도 좋은가. 그 철학적 바탕은 신뢰할 만한가.)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적폐'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 적절한 진단인가. (대통령의 방략은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처방인가.)

-'대통령의 적폐' 해소가 '개조'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변수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통령중심제의 '청와대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현재 권력의 몰염치가 더 급하고, 큰 문제 아닌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상징되는 독선적 박근혜 인사, 이를 감싸고도는 집권당의 태도, 세월호 참극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 등.)

-'사람이 중심'이라는 한겨레의 문제의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사람 중심'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

-국가개조는 제도의 개혁 아닌 근본 바탕의 수술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 통치철학의 '깊이'와 오류를 중심으로.)

-KBS 사장 해임 사태를 계기로 '길 잃은 언론'의 문제가 새삼 부각됐다. 언론개혁에 대한 <한겨레>의 인식과 의지를 듣고 싶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실상이 궁금하다. (통제 및 '협조 요청' 등 구체적 방식을 중심으로.)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데 추상처럼 엄정하지 않다. (위선과 거짓에 <한겨레>는 너그럽다. 특히

정치적 논란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중립적으로 전하는 경향이 있다. '팩트' '형평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을 일이다.)

-'거짓의 언론'과 '거짓의 정치'는 '이란성 쌍생아'다. '국가개조론'도 말잔치로 끝날 위험성도 있다. 말잔치 정치는 거짓의 정치와 다름없다. 이를 근원적으로 퇴치할 대책은?

-<한겨레>는 언론의 책무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한겨레 등 '참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사가 수적으로 열세인 것은 사실이다. 언론계의 병든 풍토를 설명하는 데 '핑계'가 될 수 있는가.)

-세월호 참극 보도 과정에서 '현상, 현실'과 동떨어진 보도가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보도자료 베껴쓰기, 기자실 문화의 병폐에서 <한겨레>도 자유스럽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기자실' 제도의 혁신을 포함한 보도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아닌가.)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시대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혁명의 시대'에 <한겨레> 역할은 무엇인가. (<한겨레>는 어떤 신문을 지향하는가.)

새삼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언론한테 형평성은 참으로 구현하기 어렵고도 귀중한 가치다. 저울대가 기울면 저울이 아니듯, 형평성이 결여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득실을 감안한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언론도 언론이 아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앞에 형평성은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믿는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댓글 중계] '전교조 변해야'에 "정부 트집잡기 모르나" VS "할말하는 용기 응원"

활동 기록 2014/07/02 14:01.18

[댓글 중계] '전교조 변해야'에 "정부 트집잡기 모르나" VS "할말하는 용기 응원"

6월25일 31면에 실린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 '전교조 변해야 산다'와 관련해 인터넷뉴스와 페이스북 댓글, 전화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김 위원은 "지금 전교조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라며 "교육감과 전교조가 한 몸이 돼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의 한 귀퉁이를 허물어내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이디 'mo\*\*\*\*'는 "사무실 문제, 조합원의 자동이체 문제 등 돈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는 부분에 대해 "한겨레의 동지애는 어디 가고 금전적인 관계로만 전교조를 이해하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의 "애초 해직자 9 명을 끌어안고 가는 게 현명한 전략이었나 하는 의문마저 든다"는 부분과 관련해 아이디 'cir\*\*\*\*'는 "내가 그 아홉 명 중 하나였다면, 그래서 동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어땠을까"라며 한겨레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 독자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해고자 문제는 노조 말살을 위한 정부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 위원은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글을 지지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아이디 '야진'은 "해고자분들이야 노조 상근 형태로든 함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보다 관습적인 투쟁 전술을 택해온 전교조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내내 전교조 지키기 싸움 하다 보내겠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hs193'도 "강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50 대 남성 독자는 시민편집인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겨레라고 전교조에 우호적인 말만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바꿀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hyori47@hani.co.kr](mailto:hyori47@hani.co.kr)

유치원생 다툼, 분쟁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되나

활동 기록 2014/07/28 11:43.45

#### 댓글 중계

유치원생의 다툼으로 '유치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최초로 열렸다는 내용의 기사 "학교 폭력·왕따 논란, 유치원으로 번지다"(7월15일치 23면)가 나간 뒤에도 학부모 공방전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시민편집인실에 전화를 걸어 분쟁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쓴 저의가 뭐냐며 항의했고, 다른 학부모는 분쟁위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온라인상에서 주장했다. 누리꾼의 댓글도 두편으로 갈렸다.

이처럼 아이들 다툼이 어른들 논쟁까지 번진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이디 'dlgo\*\*\*\*'는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요즘 부모들의 자식 과잉보호가 심한 듯"이라고 말했고 'myem\*\*\*\*'은 "아이들 왕따 논란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가 먼저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반면 아이들 다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purp\*\*\*'는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다고 이를 무조건 덮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분쟁위가 제대로 이뤄져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매뉴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fo\*\*\*\*'는 "유치원의 관리책임도 큰 문제다. 유치원에서 분쟁 해결 방법을 조속히 만들라"고 강조했다.

왕따나 학교폭력이 유치원까지 번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sara\*\*\*\*'는 "학교엔 제대로 된 선생 없고, 가정엔 제대로 된 부모 없다. 이러니 아이들이 엇나갈 수밖에"라며 개탄했고 'koco\*\*\*\*'는 "수학·영어가 아닌 도덕과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hyori47@hani.co.kr](mailto:hyori47@hani.co.kr)

[시민편집인의 눈] 일탈, 그리고 무지 / 고영재  
활동 기록 2014/07/28 11:44.56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디지털 파고에 맞서 '한겨레' 취재·제작과정 새롭게 바뀌야**

**기자 절반을 늘게 해보라...알량한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라**

미국의 한 업체가 '10 대 몰락 직종'을 예고해 못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신문기자도 '위기의 직업' 4 위에 올랐다. 신문의 불안한 운명이 예고된 지는 꽤 오래다. 디지털 문명의 소용돌이가 빠르고 거센 터다. 시대의 파수꾼, <한겨레>도 그 화려했던 무대에서 속절없이 사라지고 말 것인가.

그러나 결코 아니다. 한겨레가 짊어진 시대적 책무가 막중하다. 그 책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혼돈'을 통찰하고 이를 바로잡는 '아날로그 신문'의 역할이요, 다른 하나는 '언론'이 실종된 대한민국의 특이한 상황이 부여한 소명이다.

디지털은 빛과 어둠을 지닌 양날의 칼이다. 필자는 디지털 문명을 '창조성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2 월 28 일치 시민편집인의 눈) '인간이 지닌 창조정신의 산물이 인류의 독창성을 좀먹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아이러니는 인류의 지속가능성, 존망과 관련된 무서운 화두다.

디지털의 최대 강점, '속도' 역시 위험한 속성이다. 하루가 다르게 선보이는 디지털 기기는 이용자들의 찬탄을 자아낸다.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의 놀이에서부터 인간 사이의 소통 방식, 인간관계 맺기 문화까지 하루아침에 바꿔놓는다. 고용 시장의 변화를 포함한 경제 시스템의 변혁, 디지털 정치 등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위세를 떨친다.

문제는 그 속도가 디지털 문화의 검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기의 기능, 그 강점과 약점을 차분하게 검증할 겨를 없이 새로운 기기, 새로운 풍조가 등장한다. 이 부문에서 정부는 그 역할이 거의 없다. 제도나 전문성에서 준비가 채 안 된 터다. 기업이 앞장서 사회적 반작용을 걱정할 리 있는가. 더구나 지구촌 경제체제에서 디지털의 비중은 너무 커졌다.

인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채 방향도 모르고 달려가는 형국에 놓인 셈이다. 한겨레가 최근 설립한 '사람과디지털연구소'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아날로그 신문엔 아직 의미심장한 권리와 책무가 남아 있다. 21 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디지털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조명할.

'참언론'의 절박성을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뭔가 가슴을 짓누르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정치를 제대로 하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언제나 풀리려나. 또 어인 일로 괴이한 사건들은 잇달아 터지는가. 그럼에도 왜 변신의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가. 대한민국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살아있는가.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도대체 왜,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가. 대통령 말은 믿어도 되는가."

한겨레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디지털 난국'을 돌파하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신문들은 이미 다양한 지면 개선 노력으로 디지털 파고에 대응하고 있는 터다. 국외자로서, 지면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말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래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유일한 탈출구는 '환골탈태'(換骨奪胎)에 있다는 점이다. 뼈대는 물론 디엔에이(DNA)까지 바꾸지 않으면 활로는 결코 열리지 않을 터.

환골탈태의 길을 묻는다면 물론 막막할 따름이다. 다만 필자는 '무식한 직관'으로 두 갈래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일탈'(逸脫)의 길이요, 둘은 '무지'(無知)의 길이다.

일탈은 물론 반사회적 행위다. 일탈은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시대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법. 오늘 신문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언론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신문의 일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탈의 첫걸음은 기존의 규범을 백지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백지 위에 신문의 존재 의의에서부터 내용, 취재 시스템, 제작 과정, 유통체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서까래 몇 개 갈아 끼우는 집으로는 디지털 시대 풍우를 견딜 수 없다. 집을 헐고 다시 세우되, 전혀 다른 개념의 집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탈은 자유로운 상상력의 든든한 밑천이기도 하다. 뉴턴이 실험실에서 갇혀 지냈다면, 그 '사과'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상에서 탈출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창조적 일꾼에게는 유용한 덕목이다.

여기서 한겨레에 '위험한 도박'을 제안한다. 한겨레 구성원의 상당 부분을 '일상에서 해방된 인력'으로 운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기자의 절반을 놀릴 수도 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쉬면서, 취재 부담 없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다. 다만 새 신문의 그 '백지 설계도'를 염두에 두면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이 벌써 빗발치는 듯하다. 그러나 존망의 위기 타개책을 찾는 일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 절반 인력을 놀리는 게 과격하다면 10분의 1은 어떤가.

독자들은 속속 신문을 떠나고 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의 외면은 치명적이다. 젊은 독자들의 유입이 없다면 신문의 지속가능성도 없다. 전혀 다른 신문이 아니면 결코 이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

일탈은 익숙한 관행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다. 무릇 관행은 안일을 부추기는 법. 이제껏 언론은 언론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소비자들은 능동적이고 취향도 발랄하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도 폐기처분할 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무지’는 아는 것이나 지식이 없음을 뜻한다.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이르기도 한다. 이는 첨단지식·정보 산업에 어울리지 않는 덕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 큰 지혜는 지식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겸허함 속에 깃드는 법.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선인들의 통찰은 언제나 신선하다.

알량한 지식이나 전문성은 상상의 날갯짓을 휘방하기 마련이다. 그것들은 편견의 온상이기도 하다. 오히려 비전문가의 하찮은 의견 속에 해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듣도 보도 못한 새 신문’은 지식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 앞으로 성공적인 새 시대의 신문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지식의 산물 아닌 직관의 창작품이 될 것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시민참여 독려하는 다리가 되길

독자 의견 2014/07/28 11:42:57

#### 독자 의견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독자가 시민편집인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등 연이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처럼 마음은 있어도 막상 시간이 없어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후원하려 해도 어떤 시민단체가 좋은 단체인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등 정보가 부족해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가 시민단체를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독자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잊지 않겠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내선 안 돼



독자 의견 2014/07/28 11:41.08

### 독자 의견

세월호 사건 이후 1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겨레> 1 면에 '잊지 않겠습니다' 기획을 꾸준히 싣고 있는 점에 많은 독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희생된 학생의 초상화와 부모의 편지가 안타까움을 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중 한 50 대 독자는 "문제에 맞서는 것은 묵묵히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등 아직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만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조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잊혀질 권리', 한겨레에도 적용되길

독자 의견 2014/07/02 13:59.52

'잊혀질 권리', 한겨레에도 적용되길

### 독자 의견

10여년 전에 실려 <한겨레> 누리집(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사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독자들이 기사를 지워달라고 연락했다.

1999 년 당시 선장인 독자가 운행하던 여객선이 안개 때문에 마주 오는 배와 충돌했다. 15 년이나 지난 이 사건이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되는 바람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가족들까지 따가운 눈초리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액젓회사를 운영하는 한 독자는 2003 년 동명의 액젓회사가 불량 제조한 사실이 계속 검색돼 계약 파기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으면 개인적인 사유로 기사를 지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지우면 기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장은 "오래전 기사여서 기록의 가치보다 개인의 피해가 클 경우 지워주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도 올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중학생 제자와 교사, 사랑이다 범죄다 갑론을박

활동 기록 2014/08/29 09:32.34

## 댓글 증계

25살 남교사가 중학생 여제자와 서로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할까?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의 논란은 교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었다. 기사 “중학생과 사랑한 어른, 처벌해야 할까요?”(8월5일치 8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와 ‘처벌은 과잉처사’라는 것으로 갈렸다.

형법은 만 13 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때만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아이디 ‘김\*\*\*\*’는 “신체와 정신 발달이 조숙하고 자율권을 더욱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기준이 만 16 세인 데는 이유가 있다”며 연령기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공\*\*\*\*’는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책임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h\*\*\*\*’는 “청소년의 복장이나 머리는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유독 성에 대해서만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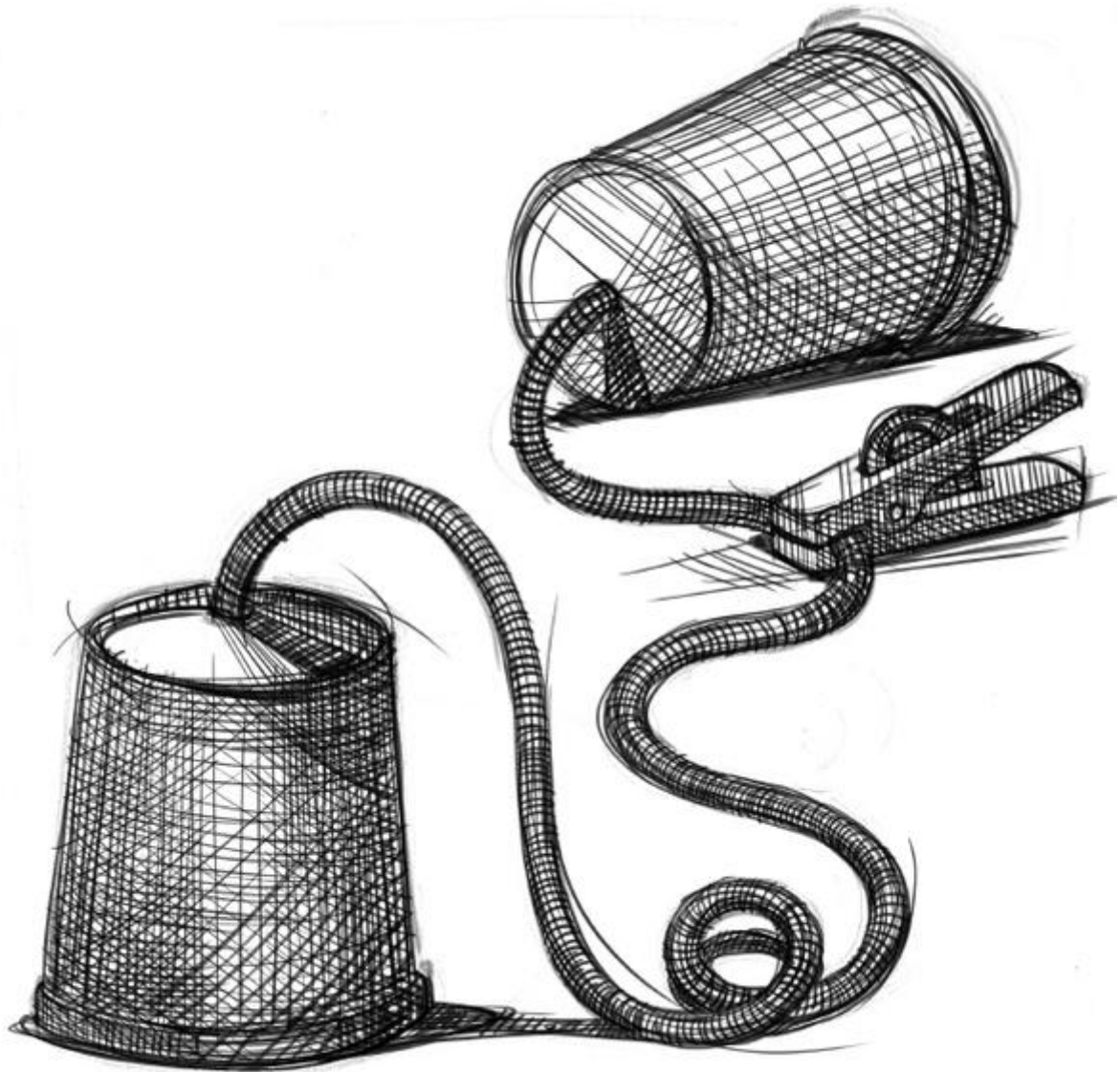
“선생님을 사랑했다”는 제자의 말에 청소년의 성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in\*\*\*\*’는 “중학생이면 2 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다. 나도 중학생 때 선생님을 좋아한 적 있다”며 제자를 지지했고, ‘탐\*\*\*\*’는 “사랑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제 3 자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라며 “사회통념을 들어 무작정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령기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to\*\*\*\*’는 “나이가 아닌 제자와 교사의 특수한 관계로 봐야 한다”며 “법으로는 무혐의라 하더라도 직업 윤리적으로 따져 징계해야 함은 분명하다”고 썼다. ‘ab\*\*\*\*’는 “여학생이 사랑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된 입장에서 학생을 생각해 절제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co\*\*\*\*’는 “이전에 30 대 여교사와 중학교 남학생이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는데, 여교사가 여론에 마녀사냥을 당한 기억이 난다”며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경우에 더욱 신상이 공개되고 매장당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hyori47@hani.co.kr](mailto:hyori47@hani.co.kr)

[시민편집인의 눈] 말이 사라진 시대 / 고영재

활동 기록 2014/08/29 09:34.28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기본 일깨운 프란치스코 교황의 '독백론'은 한겨레에 화두던진 것  
세월호법은 민생법안 아닌가? 경제민주화 실체 뭔가? 되짚어보아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컸다. 말씀은 고통 받는 이들에겐 위안을, 삶이 고단한 이들에겐 희망의 빛을 안겼다. 그것은 또한 권력자들 어깨에 떨어지는 무서운 죽비였다.

교황이 유별난 화두를 내세우진 않았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말했을 따름이다. 그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절실함,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의 어두운 얼굴을 새삼 떠올렸다. 한반도의 차고, 분단의 모순은 평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신념을 토로했을 뿐이다.

그러나 교황이 한국에 머문 100 시간 동안, 시민들은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였다. 종교적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들은 교황과 함께 '행복한 100 시간'을 보냈다.

그 힘은 겸허함과 소박성,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는 형식적인 예우를 뿌리쳤다. 그는 고급차, 좋은 숙소를 마다했다. 대신, 대통령이 외면한 세월호 유족들의 손도 잡아줬다. 그리고 진심을 말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꽃동네에선 선 채로 장애아들의 공연을 지켜보았다. 대중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소탈함에 시민들은 한없는 믿음을 보였다. 위안부 할머니나 제주·밀양의 상처받은 이들도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교황은 보통 인간이 겪는 고통,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꿰뚫고 있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명쾌했다. 그는 권력자, 강자의 소통 노력 없이 인간다운 세상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웠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말은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에게 향하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 깨어 있는 사람들의 작은 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교황이 제시한 '행복 10 계명'에 대한 호응도 뜨거웠다. 10 계명엔 인간, 평화, 자연에 대한 교황의 철학이 서려 있다. "남을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인간답게 살라."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에 대한 교황의 통찰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 교황의 따뜻한 위로와 충고는 위안과 함께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교황의 '독백론'은 언론에 정치적 보도와 관련된 과제를 던진다. 정치도 말이요, 언론도 말인 터다. 정치 행위의 출발점은 말이다. 정치인은 간절한 말로 유권자들에게 읍소한다. 신명을 바쳐 나라에 헌신할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어색하지만 '선량'(善良)이란 아름다운 이름은 국회의원 몫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시민들에게 설파한다.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시하는 것도 말에서 시작된다. 치열한 정쟁의 무기도 물론 정치인의 헛바닥이다. '한 나라의 운명이 정치인의 세 치 혀에 달려 있다.'

그 정치는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시민들은 언론의 창문을 통해 정치판을 엿볼 따름이다. 대통령의 말, 여야 대표의 말, 국회 실력자의 말이 언론의 '여과장치'를 거치게 마련이다. 그 말은 독백인가, 진지한 대화인가. 세월호 유족을 한사코 만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항변은 적절인가. 장밋빛 공약은 실현성과 실천의지를 수반하고 있는가. 물구나무선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은 냉철한가. 정치인들 말의 진의는 무엇인가. 그 말은 과연 진정성을 갖췄는가. 모두 언론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유감이다. 언론의 여과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진실과 동떨어진, 의도된 정치적 발언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경우도 적잖다. 이 관대한 보도 문화는 정치 풍토의 황폐화를 부추겼다. 정치인의 말에 대한 시민들의 통념은 뿌리 깊다. '정치인은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정치 불신의 출발점이 말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 극심한 사회분열의 큰 책임도 언론에 있는 셈이다. '독백의 시대', 말이 사라진 시대의 원흉은 언론이다.

물론 '정치인의 진심'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보도거리가 된다는 점도 사실이다. 문제는 정치 보도 개선의 노력이고 의지다. 우선 작은 것,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볼 일이다.

언론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는 용어를 즐겨 쓴다. 정치 기사에서 두드러진다. 정치판과 언론계는 언어의 마술사들이 모인 집단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 난국 탈출용으로 애용하는 '민생법안'만 해도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은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 우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거기엔 함정과 꼼수가 숨어 있다. 언어의 마술은 곧잘 실제와는 무관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터다. '민생법안'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법안'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세월호법'은 '일반 시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의 대상'일 뿐이다. '세월호'가 오늘의 삶은 물론,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임에도.

'경제민주화'도 박근혜 대통령의 진면목을 숨긴 '상징조작'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살얼음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한몫했다. 줄곧 경제민주화 소신을 피력해온, 그럴듯한 경륜과 풍모를 지닌 '바지 사장'까지 앞세운 정교한 계략의 성공이었다. 진실과는 동떨어진, 정치권과 언론의 합작품인 용어를 남용하는 데 <한겨레>도 예외가 아니다.

말이 사라진 시대에 '익명의 발언'에 대한 보도 원칙도 엄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사엔 이따금 이름을 숨긴 채 '양심의 소리'를 토로하는 의원들이 등장한다. 말을 직업으로 삼는 정치인의 익명은 배제하는 게 원칙이다. '익명의 정치'는 뒤흔 정치가 아니다. 익명의 발언은 진심의 소리가 될 수 없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선거 승패 보도의 함정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승패가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터다. 드높은 국민의 탄식 속에, 최근 선거에서 뜻밖에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 모습을 보라. 투표율과 득표율만 따져보면 그 경박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새누리당 압승.' 큼지막한 신문 제목이 오만한 새누리당의 든든한 뒷배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독자 의견] 다양한 직업군의 글을 실어 달라

독자 의견 2014/08/29 09:30.49

독자 의견

독자의 글을 기고하는 '왜냐면' 지면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는 한 독자가 의견을 전했다. "노동자가 말하는 노동문제, 일반 사병이 제기하는 군내문제는 기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쓴 글과 달리 때론 더 큰 울림을 준다"며 "그런 점에서 '왜냐면' 지면에 교수나 전문가의 기고문보다는,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체험과 삶이 들어간 글을 많이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독자 의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도 조명해야

독자 의견 2014/08/29 09:29.19

#### 독자 의견

“일반인 희생자도 잊지 말아 달라”며 한 독자가 시민편집인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서 일반인 희생자가 소외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론 단원고 학생들이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 수도 많아 더욱 조명되어야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역으로 일반인 희생자들이 소외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반인 희생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언론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적극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겨레> 1면에 연재하고 있는 ‘잊지 않겠습니다’에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사연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독자의견] 영어 표현, 한글로 쉽게 풀어써 달라

독자 의견 2014/11/18 14:40.35

#### [독자의견] 영어 표현, 한글로 쉽게 풀어써 달라

60 대 독자가 한겨레 시민편집인실로 전화를 걸어와 “한·중 FTA 타결 기사에 쓰인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의 뜻을 모르겠다”며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단어 뒤에 영문 표기를 써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독자는 “비슷한 내용으로 몇 차례 건의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라면 좀 더 자세히, 친절하게 풀어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독자의견] 다른 시각 보여주는 칼럼들 많이 실었으면  
독자 의견 2014/11/18 14:42.12

**[독자의견] 다른 시각 보여주는 칼럼들 많이 실었으면**

지난 12 일 게재된 '사랑은 밥에서부터 시작해야(김선주 칼럼)'를 읽은 70 대 독자가 "우리 사회에는 한번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자라는 인식이 깔려있는데 김선주 칼럼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줘서 좋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독자는 또 "평소 김선주 칼럼과 집필노동자 이라영씨가 쓰는 글을 챙겨 읽는다"며 "특히 이라영씨 글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쓰는 것 같아 좋아한다"고 말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독자의견] 세월호 잊지 않도록 한겨레가 더 노력해야  
독자 의견 2014/11/18 14:51.30

**[독자의견] 세월호 잊지 않도록 한겨레가 더 노력해야**



한겨레가 연재하는 <잊지 않겠습니다>를 반가운 마음으로 읽고 있다는 여성 독자가 "처음에는 신문 1면에 연재했었는데 어느새부터가 2면에 실리고 있다. 1면에서 볼 때랑 2면에 있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며 "나중에는 3, 4면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독자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행사 관련 기사는 2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전부"라며 "사설에서라도 '세월호 연장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한겨레에서 좀 더 많은 기사를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독자의견] 스포츠 기사 다양하게 실어주길

독자 의견 2014/11/24 11:54.35

[독자의견] 스포츠 기사 다양하게 실어주길

75살 독자가 한겨레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2014 프로야구 시상식과 관련해 한겨레는 최우수선수(MVP) 수상자인 서건창만 다뤘다"며 "일 년에 한 번 프로야구를 결산하는 행사인데, 각 부문 수상자 정도는 언급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했다. 이어 "한겨레는 스포츠면이 다소 빈약한 것 같다"며 "한겨레에서 다루지 않으면 스포츠신문을 사서 볼 수밖에 없으니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기사를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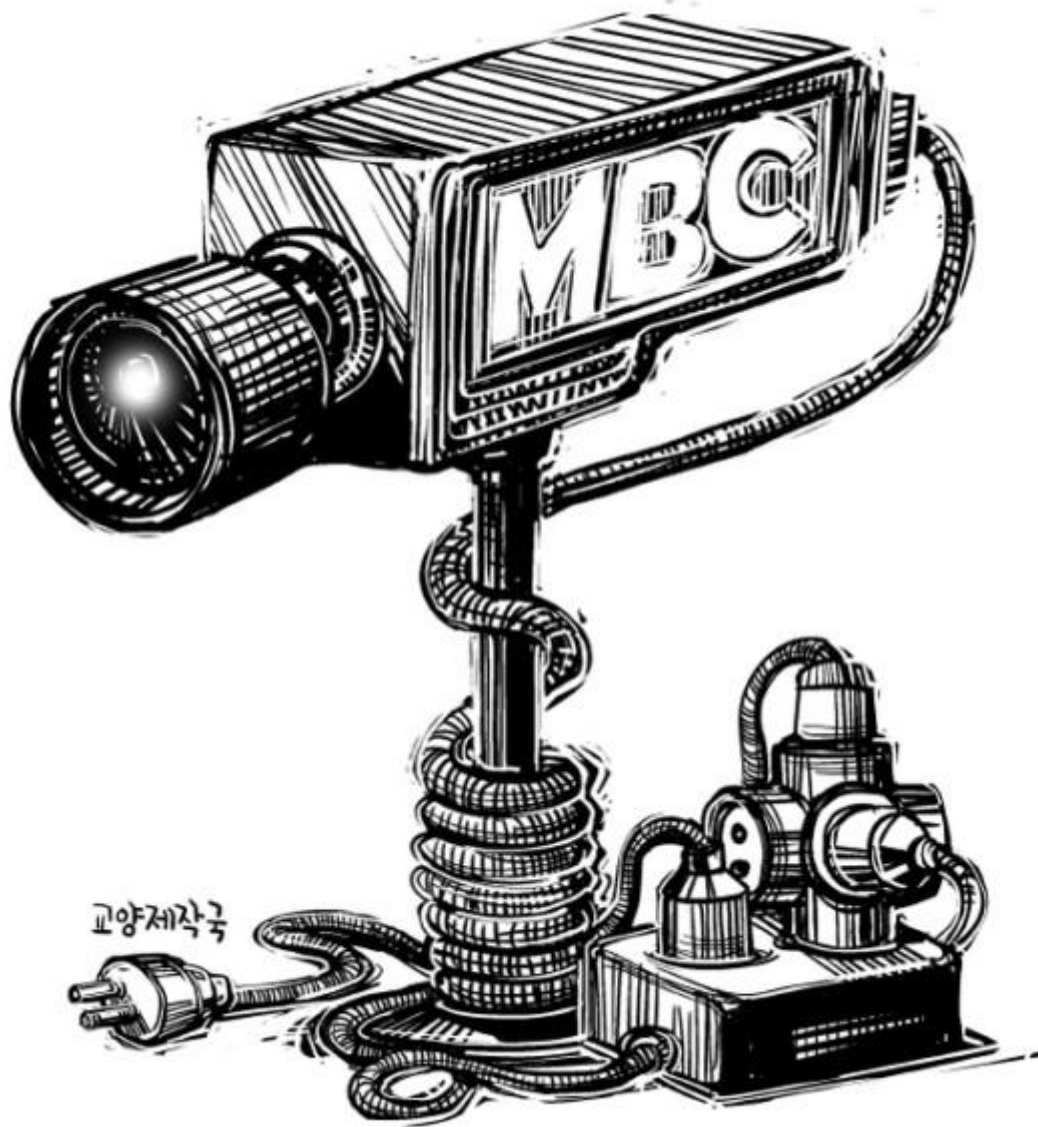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시민편집인의 눈] 역사의 뒷걸음질 / 고영재

활동 기록 2014/11/28 10:03.29

[시민편집인의 눈] 역사의 뒷걸음질 / 고영재

'MBC 인사 사태' 전말 궁금한데 한겨레도 해소시켜주지 못해  
민주적 장치서 권력의 흥기로 돌변한 '방문진' 깊이 다뤄보아야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엠비시(MBC) 사태'의 전말이 참으로 궁금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공영방송 엠비시에서 벌어진 터다. <한겨레>도 그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 사실과 노조의 반발을 '덤덤하게' 전했을 따름이다.

엠비시는 최근 교양제작국을 전격적으로 해체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엠비시구성작가협회의 성명에 담겨 있다. “공공재인 전파를 빌려 사용하는 공영방송 엠비시의 공익성을 담보해온 것은 다름 아닌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었다. 교양제작국 해체는 권력에 비판의 칼을 세우고 감시 기능을 해온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역할을 거세하겠다는 뜻이다.” 엠비시 안에 남아 있던 권력 비판의 싹을 도려내는, ‘길들이기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시각의 표현이다. 2012년 엠비시는 이명박 권력과의 마찰로 ‘170일 파업’이라는 호된 흥역을 치렀다. 회사 쪽은 이에 <피디(PD)수첩> <남극의 눈물> 등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하는 강수로 맞선 바 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는 그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피디와 기자들을 대거 ‘유배’ 보내거나 ‘교육명령’을 내렸다. 그 ‘이상한 인사’ 대상자들은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경영진 횡포를 비판해 왔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들은 대체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는 평판을 안팎에서 받아 왔다. ‘명백한 보복인사’라는 노조의 비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석 논문 조작사건’을 밝힌 피디는 신사업센터로, 피디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피디,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을 파헤친 피디는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부서로 보냈다. 한국피디연합의 작품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작품상’ 수상자 등에겐 ‘교육명령’이 떨어졌다. 이들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교육명령은 가나안 입소 직전 취소됐다. 엠비시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의 못매를 견디지 못한 탓으로 해석한다.

무한경쟁 시대에 회사가 경쟁력 출중한 일꾼들을 내치다니. 괴이한 일이지만, 곡절이 있을 터. 회사의 해명을 신문에서 읽었다.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직을 중심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해) “오랜 기간 우리 사회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온 곳이며, 교육내용도 우리 사회 가치를 고양하는 등 좋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말실에서 졸속’으로 조직 개편 작업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파다하다. 필자도 엠비시 사장의 설명이 듣고 싶어졌다. 비서실장에게 ‘5분 통화’ 주선을 부탁했다. 사장실 문턱은 역시 높았다.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홍보국이 따로 있다. 그 국장에게 들어 보라.”

엠비시 사태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우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형국을 너나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릇 조직의 우두머리는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인사를 활용하는 법. 엠비시는 그 길을 거부하고 거슬러가는 길을 선택했다. ‘보복 인사’, 유능한 기자·피디들에게 재갈을 물리고도 제대로 된 방송이 가능하겠는가. 그런데도 엠비시 내부는 잠잠하다. 바깥쪽에서는 이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 앞 농성 같은 최소한의 캠페인조차 없다. 노조가 저항할 의지도, 기력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 까닭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최근 2년 남짓 동안 엠비시에선 해고와 징계, 부당한 전배 등 비상식적인 인사가 되풀이됐다. 그것도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는 연인원으로 200명에 가깝다. 해고 무효,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노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만 30건에 이른다. 해직자는 아직 7명이나 남아 있다.

마이크를 쥐고 방송하는 현장 기자는 100여명.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기자들이 '외인부대'다. '170일 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충원된 대체인력이 그들이다. 공영방송의 몰락을 걱정하던 핵심인력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신사업단에서, 수원지사, 인천지사에서 '경영합리화' 사업에 열중이다. 회사 내부엔 조직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혁신'을 외치는 정치권도 중대한 사태를 모른 채 외면한다. 그들이 왜 혁신의 대상인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지를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170일 파업'을 끝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주자)을 포함한 여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누구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마음이 바뀌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등 여야 합의 사항은 실천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무관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엠비시 사태는 또한 '민주적 절차나 제도'의 허구성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엠비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군부독재 청산의 상징물로 첫발을 내디뎠다. 방문진의 출범은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던 지배권을 민간에 되돌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방문진은 엠비시 사장을 선임하고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특별법인이다. 1988년 방문진 체제가 새 출발할 때 "드디어 공정한 방송, 자율성이 보장된 공영방송 시대가 열렸다"는 환호의 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권력 의지에 따라 민주적 장치는 흥기로 돌변하는 법. 방문진을 운영하는 이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사진 9명은 청와대와 여야가 사이좋게 3명씩 추천하고 있다. 그 이사진이 사장을 임명하고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 문제는 그 이사진의 자율성, 독립성이다.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힘, 대통령이 군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엠비(MB) 시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공든 탑 쌓기는 어려워도 이를 허물어뜨리기는 순간인 법. 박정희 시대 철권통치시대의 방송 장악 판박이를 40년 뒤 우리는 다시 보고 있다.

역사 발전의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는 데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언론 민주화 역사 흐름을 거역하는 엠비시, 민주 체제를 뒤흔드는 사태 앞에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세태가 서글프다. <한겨레>까지 그 세태에 박자를 맞추는 듯하다니.

[댓글중계] 안보 위협하는 군 비리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독자 의견 2014/11/28 10:07:56

[댓글중계] 안보 위협하는 군 비리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방위사업청이 통영함에 군용 음파탐지기 대신 어군탐지기를 달아 해군에 넘기려 한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최첨단이라는 통영함에 물고기 쫓는 '어군탐지기'"(11월 19일치 3면) 기사에 댓글 100여개가 달렸다.

정치권에서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여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방위사업 관련 비리가 또다시 일자 아이디 '짐자\*\*\*\*'는 "해저엔 어군탐지기, 강물엔 로봇물고기"라며 현실을 풍자했다.

'ki\*\*\*\*'는 "전작권은 미군에 맡겨놓았으니 할 일도 별로 없지 않느냐"며 "고기나 잡고 노는 게 낫겠다"고 군 당국을 조롱했고, 'gh\*\*\*\*' 또한 "가만히 있느니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참치라도 잡는 게 이득, 이것이 창조경제"라며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군의 비리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tb\*\*\*\*'는 "군 내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0%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며 해이해진 군 기강에 우려를 표했다. 're\*\*\*\*'가 작성한 "국가 안보마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댓글에는 156명이 공감함을 표시했다.

누리꾼들은 다른 기관들이 저지른 비도덕적 행위에 비해 군대의 비리에 더욱 엄중하게 접근했다. '태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zo\*\*\*\*'는 "합동수사본부가 먼지까지 탈탈 털어내고, 썩은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음탐기 납품 계약을 맺은 군수업체 대표와 전직 방사청 직원들이 2억원짜리 음탐기를 41억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실에 대해 'ba\*\*\*\*'는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구나. 음탐기 대신 어군탐지기로 달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 조씩 까먹고.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혀를 찼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시민편집인의 눈] '찌라시' 시대  
활동 기록 2014/12/26 11:08.11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근거 있는 듯한 '정윤희 문건'...객관적 근거 없는 현재 결정문  
치열한 언론정신 사라진 짜라시 시대...'한겨레'가 바로잡아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이 담긴 '정윤희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은 '짜라시'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교시'에 국정 농단 의혹은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유출 경로가 검찰 수사의 도마 위에 올랐을 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수난당하는 꼴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문건을 결코 짜라시로 여기지 않는다. 그 문건의 진실성을 확신해서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잇단 '깜짝 인사' 스타일 탓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흔히 말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나라 살림을 맡는 중책이다.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그 역동성이 죽고 살고 하는 것도 인사에 달려 있다. 인사에는 정권의 통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솜씨는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참신한 사람보다는 흠결투성이 인사가 많았다. 책임자 대신 '보은 인사'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 많은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을 꼽자면 다섯 손가락을 채울 수나 있을까. 물러난 총리를 되쓴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용병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 없는 풍설을 모아 놓은 짜라시로 치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짜라시가 선을 보였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그것이다. 결정문은 정당 해산의 객관적 근거를 담아내지 못했다. 뚜렷한 증거 없는 '사형 선고'는 '사법 살인'에 다름없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헌재의 결정은 법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도 하다. 헌재는 법의 엄정성을 짓밟았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라는 법의 정신을 어겼다.

헌재의 결정은 억지스럽다. 헌재는 헌정 사상 첫 정당 강제해산을 판결하면서, 통합진보당의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았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같다는 게 핵심 논지다. 이는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실로 허튼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제헌헌법이야말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터다. 제헌헌법이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한층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말이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헌재 판단의 진지성을 의심하게 한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내란음모 혐의와 폭력혁명조직인 아르오(RO)에 대해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빌미로 삼았던 사안이다.

8 대 1.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찬반 의견 분포다. 말 없는 숫자가 이 시대의 현주소를 웅변한다. 숫자에서 '억압'과 '경직성'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다양성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자 생명력의 원천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모태이다. 약자 보호 정신, 사회 통합 원리의 뿌리이기도 하다. 헌재 구성 방식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나라 밖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바라보는 눈도 마음에 걸린다.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격의 치명적 손상이기 때문이다.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벌써부터 헌재의 결정이 베니스위원회의 '정당 해산 5 대 기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지 적이 의심스럽다.

짜라시 시대의 결정판은 언론이다. 언론이 진실과 확인된 정보의 상징이라면, 짜라시는 '미확인 첩보 모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칫 짜라시로 전락할 수 있는 게 언론이다.

지난 20 일치 두 신문, <한겨레>와 <조선일보> 1 면의 핵심 메시지는 극적으로 대비됐다. <한겨레>는 이례적으로 사실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을, <조선일보>는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를 각각 실었다. 두 신문은 사실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에서도 엇갈린 논지를 폈다. 한쪽은 '확실한 근거 없는 결정은 사법사에 남을 큰 오점'이라고 규정한 반면, 다른 한쪽은 '종북 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헌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짜라시에 가깝다. 하나의 사실에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 이는 대한민국 언론의 모순을 상징하는 표징이다. <한겨레>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헌재 결정의 논거의 취약성을 비판했다면,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극형을 선고할 때, 그 기준은 확고한 증거이지 피고의 인간 됨됨이가 될 수 없는 법.

요즘 맹위를 떨치고 있는 '종북' 딱지의 어원을 곱씹어볼 필요를 느낀다. 이 말은 정치권에서 공격 무기로 '창안된' 용어다. 꼭 북한과의 실체적 연계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이 말을 즐겨 쓰는 언론도 이 말 앞에서 주눅 든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종북 집단'에 대한 취재 노력이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한겨레>는 지난 23 일치 4 면에서 '해산 찬성 많은 이유, 진보당 정치 실패 탓도 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무관심 탓은 없는지 궁금하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가히 찌라시 시대다. 찌라시 뒤로 재빨리 피신한 대통령의 처신, 현재의 찌라시 결정문은 치열한 언론 정신이 사라진 시대의 산물이다. 이 시대의 물길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언론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우선 <한겨레>에서.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0762.html>

[댓글중계] '땅콩 회항' 사건의 본질, 잊으면 안 돼

연간 활동기록 2014/12/26 11:09.41

[댓글중계] '땅콩 회항' 사건의 본질 잊으면 안 돼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기사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현아 부사장 '사무장 내려라' 고함...대한항공 뉴욕공항 후진 '파문'" (12월8일치 2면) 기사를 읽은 누리꾼 'pt\*\*\*\*'은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어떤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재벌 매뉴얼에는 그런 규정도 있나 봐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성질내는 그런 규정 말이에요"라며 조 전 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했다.

'ce\*\*\*\*'는 "한 개인의 '갑질'에 의해 대기업 경영철학의 본질이 드러났다"며 "재벌로 태어나 노동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밑바닥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애당초 없었다"며 논란을 일으킨 재벌 총수에게 일침을 가했다.

12 월 12 일치 2 면에 실린 "승무원·사무장 무릎 꿇리고 혼내" 기사에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왜 충성을 강요당하며 살아야 하는가”(삼성\*\*\*\*),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무릎을 꿇게 하다니.... 자존감까지 뭉개버리는 회사. 왜 저런 직장에 다녀야 하나요”(hu\*\*\*\*) 등 한탄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기사에 누리꾼 '사무\*\*\*\*'는 “부모도 못 시키는 자식 교육을 검찰이 시켜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라고 꼬집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은 커져갔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 전 부사장의 외모를 비하하고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co\*\*\*\*'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감정을 추스르자. 이보다 중요한 일들이 더 많다. 이미 조현아는 충분히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NO\*\*\*\*' 역시 “조현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무장 연봉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는 것인가? 조현아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0761.html>

[독자의견] 양성평등에 반하는 단어, 자제해야

독자 의견 2014/12/26 11:10.54

[독자의견] 양성평등에 반하는 단어, 자제해야

12월9일치 신문에 실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기고문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를 읽은 50대 독자가 “기고문 내용 중 '타이타닉호가 처녀 항해에서 침몰했을 때, 1500여명이 죽고 700여명이 구조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단어”라는 의견을 전했다. 독자는 “이 표현을 보고 여자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비록 기고문일지라도 편집 과정에서 수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0764.html>

[독자의견] 학벌 사회 조장하는 표현 삼가야  
독자 의견 2014/12/26 11:11.45

[독자의견] 학벌 사회 조장하는 표현 삼가야

40 대 남성 독자가 12 월 5 일치 사설 “서울대 성추행 교수’ 구속 사건이 말하는 것”을 읽고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한겨레>가 학벌 사회의 벽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에서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서울대학교’라는 표현을 써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 월 30 일치 사설에서도 ‘서울대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썼다”며 “중·고졸 출신도 <한겨레>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표현은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0763.html>

[시민편집인의 눈] 야심찬 기획, 아쉬움도 컸다  
연간 활동기록 2015/02/02 13:45.28

[시민편집인의 눈] 야심찬 기획, 아쉬움도 컸다/ 고영재

등록 : 2015.01.29 18:49

툴바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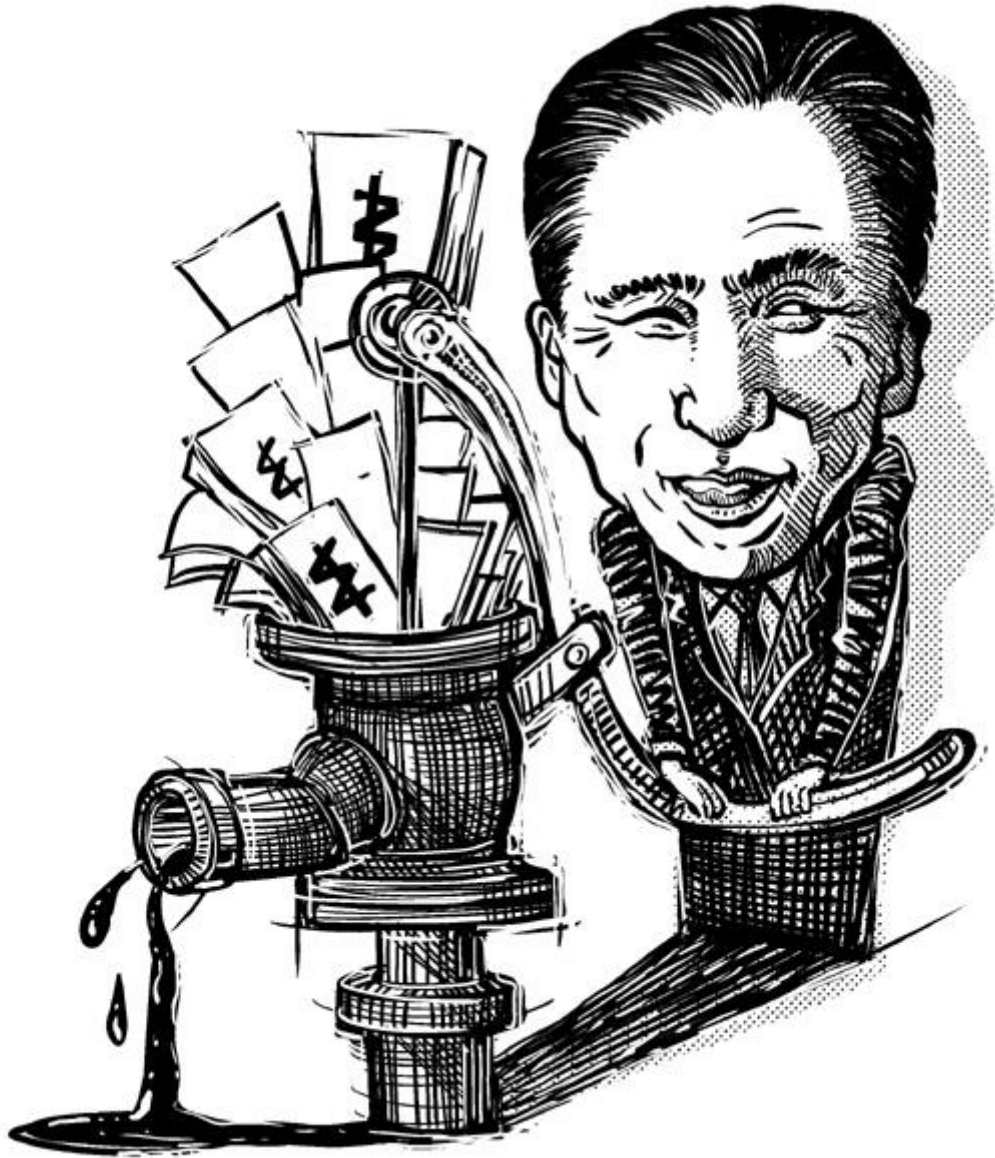
- 스크랩
- 오류신고
- 프린트

기사공유하기

- facebook0

- [twitter1](#)

보내기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자원외교 해부’ 독자들 호응 끌어냈지만  
시의성·사실 확인·비판 균형성에 아쉬움**

<한겨레>가 지난주, 뜻깊은 기획물을 선보였다. 1월19일치부터 닷새 동안 연재된 ‘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가 그것이다. 특별취재팀이 세달 동안 추적한 성과물이었다. ‘화려한’ 편집은 한겨레의 의지와 의욕을 웅변하는 듯했다. 지면을 할애하는 데 아낌이 없었고, 레이아웃은 파격적이었다. 독자들도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아래의 ‘댓글 중계’ 참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최근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공분'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터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와 고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는 이명박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겨레도 이번 기획 의도를 밝혔듯, 시리즈는 국회 조사 활동에 때맞춘 '지상 국정조사'를 보는 듯하다. 시리즈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 또는 의혹들을 전한다. 특히 페루와 볼리비아 자원개발 현장 취재팀은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시리즈가 제시한 주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5 년 동안 자원외교에 31 조원을 투자해, 이미 확정된 손실만 4 조원에 가깝다. 석유공사는 3 억달러짜리 페루 석유회사를 12 억달러에 인수했다. 그나마 유전 탐사 광구에서는 석유보다 물을 더 퍼내고 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헛꿈이었다. 멕시코 구리광에서는 거의 4 천억원이 행방불명됐다. 관련 공기업들은 사업성보다는 '엠비(MB)의 꿈'을 위해 돌진했다. 그들은 엄청난 사업 손실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 공기업 실무자는 '안될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벌어졌는데, 당시 주무 장관은 '총리실에서 주도한 일'이라며 발뺌한다.”

한겨레의 시리즈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선 이명박 시대의 요지경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닷새 동안, '광대한' 지면 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접했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꼈으리라. 그 까닭은 '탐사 보도'의 세가지 요건에 숨어 있다. 하나, 시의성은 적절한가. 둘, 충분하고도 친절한 현장 취재와 사실 확인 작업이 보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셋, 탐사 주제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 국정조사가 이번 기획의 시의성을 돕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때늦은 기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명박은 '경제대통령' 이미지로 2007 년 대선에서 가뿐히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가 '경제 제일' 시대가 요구하는 강점을 지닌 것은 사실이었다. 대기업 대표, 그것도 '속도전'에 능한 건설사 최고경영자 경력은 그만의 자산이었다. 거기에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보태진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그러나 그는 너무 일찍 자신의 밑천을 드러냈다.

이명박의 '시야'는 좁았고, 철학적 밑바탕은 천박했다. 그는 '청계천'에서 얻은 점수를 무기 삼아 '4 대강'을 파헤쳤다. 그는 자연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분간하지 못했다. 이명박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데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임기 초부터 '눈앞의 성과', '생생내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었다. 2008 년 쿠르드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2009 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 기 수출 과정에서도 성과에 대한 뺨뺨기 의혹과 계약 조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엠비 자원외교'에 대한 탐사보도 시점은 적어도 4~5 년 전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의 친절성, 사실의 정확성, 주장의 명료성과 관련된 문제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제점이 더러 눈에 띈다. 무엇보다 르포 기사의 현장감이 독자 기대에 부응했는지 의문이다. 19 일치 6 면 '볼리비아 우유니 자원개발 현장' 기사엔 '현장'이 없다. 대신 이 기사 앞부분엔 주제와 무관한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기업 포스코는 '현지 파견 직원에게 1 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시키다가' 철수시킨 것인지 궁금하다. 이상득을 큰소리치게 만든 '양해각서'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쉽다.

같은 면의 르포 기사 '페루 해양시추 사비아페루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12 억달러에 인수한 페루 석유회사에 대한 현지 대학 교수의 진단은 타당한 것인가. 그의 '3 억달러'설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가. 믿을 만하다면, 12 억달러 인수 결정은 명백한 범죄 아닌가. 그 협상을 주도한 한국 쪽 대표는 도대체 누구인가, 멍텅구리 아닌 그는 무엇 때문에 인수 가격을 4 배나 부풀린 것인가. 또 '(탈라라) 이곳엔 없고, 리마에 있다'는 한국인 직원을 찾아 나선 흔적도 명확하지 않다. 현지 법인의 현재 경영 상황, 한국 쪽 인력 규모, 경영 참여 형태 등도 궁금하다.

23 일치 4 면 '풀어야 할 5 가지 의문' 가운데 멕시코 구리광 '볼레오'에서 사라졌다는 3962 억원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기사에 언급된 횡령 사건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지른 사건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 실종된 돈의 주인 또는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다. 사업 주체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인지, 이 사업 채권은행인 미국 수출입은행인지도 불분명하다.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디서(한국 혹은 멕시코, 아니면 미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체적인 내용이 명쾌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번 '탐사기획'은 △뒷돈과 조작의 신화 △강압과 왜곡, 지경부 △재앙이 된 무능, 공기업 △눈먼 돈의 비극, 정경유착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 등 5 개 소주제를 열개로 삼았다. 시리즈는 몇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자원외교의 허상을 고발하는 데 기여했다. 탐욕과 비리, 무능과 무책임, 강압과 조작으로 얼룩진 이명박 시대 자원외교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그러나 비판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자원외교 자체는 어느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안의 심각성, 시급성에서 결코 뒷전으로 밀려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템도 필요했다. 대형 기획물인 만큼 '반론권' 차원에서도 '성과와 실패'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경'을 보여주는 그림이 요긴했다. '문제의 10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75894.html>

[댓글중계] "진실 밝혀줄 후속 보도 기대한다"

독자 의견 2015/02/02 13:46:18

**"진실 밝혀줄 후속 보도 기대한다"**

지난 19일부터 닷새에 걸쳐 보도한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 탐사기획에 많은 누리꾼들이 의견을 남겼다. '페루 대통령도 말렸지만...3억달러짜리를 12억달러에 덤석'"(1월19일치 1면)을 읽고 누리꾼 'or\*\*\*\*'는 "오죽하면 상대국 대통령도 말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을 보면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며 관심을 보였다. 'pa\*\*\*\*'가 작성한 댓글 "국민 세금이 이명박의 쌈짓돈이 되었구나"에는 55명이 공감의 표시를 던졌고, 'sh\*\*\*\*'는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어서 세금을 채우면 된다"고 꼬집었다.

1 월 21 일치 6 면에 실린 "쿠르드 유전 문제될 게 뻔해' 중동 담당 실무자 끝내...' 기사를 읽은 'sa\*\*\*\*'는 "책임은 결국 말단 직원의 몫"이라며 "공기업의 경우 퇴임했더라도 지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색\*\*\*\*'은 "이젠 웬만한 일에는 둔감해지는 것 같다"며 "분노할 시기를 놓쳐버린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시간끌기·정부는 왜곡"...국정조사가 위기다'(1 월 23 일치 5 면) 기사에 'yo\*\*\*\*'는 "현재 야권의 전투력으로 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틱톡\*\*\*\*'은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엠비 정권이 강행한 것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힘들게 기사를 읽었다는 'ka\*\*\*\*'는 "방대한 양의 기사에 수많은 인물, 업체, 국가가 등장해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맥락을 따로 정리해줬다면 이해하기 쉬웠을 듯"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s7\*\*\*\*'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쳐주길 부탁한다"며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위해 <한겨레>가 끝까지 후속 보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5895.html>

[독자의견] 답답한 정치 상황, 숨통 트일 기사 부탁

독자 의견 2015/02/02 13:47:18

**답답한 정치 상황, 숨통 트일 기사 부탁**

<한겨레>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70 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요즘은 신문을 읽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면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독자는 "계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힌다"며 "야당 전당대회 관련 기사를 쓸 때 양강 구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는 기사로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기사가 신랄하게 비판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최근 <한겨레> 기사를 읽고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5896.html>

[독자의견] 가독성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해야

독자 의견 2015/02/02 13:47:54

**가독성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해야**

"'뉴스쑥', 'ESC' 등 <한겨레> 기획연재를 유익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뗀 20 대 독자가 지면 편집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독자는 "기사 내용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제목들이 한 문장이 채 끝나기 전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건의했다. 독자는 "기사를 읽다가 중간제목들 때문에 흐름이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문단과 문단 사이에 중간제목을 넣는다면 더 깔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독자는 "사소한 지적일 수 있으나 편집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준다면 더 편하게 기사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5896.html>

[시민편집인의 눈] 이심전심

활동 기록 2015/02/27 11:03.18

[시민편집인의 눈] 이심전심 / 고영재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이완구 관련 '충청 민심' 한겨레가 실제 취재했어야  
취임 2년 박 대통령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장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행복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취임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간 데 없다. 박근혜 정권 2년에 대한 평가는 정파와 계층을 넘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 일 '4 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민행복은커녕 당장 내일 먹고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야권의 비판도 매섭다. 한 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 2 주년을 총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나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대선 공약은 파기됐고 업적은 없이 빈 강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가 지난 2 년간 입만 열면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말해왔지만 각종 경제지표 등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비판은 이어진다.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도 증세는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공약을 어겨놓고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박 대통령의 폐쇄적 용인술도 다시 고난을 맛봤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이완구를 선택했다. 감각과 눈치, 정치인이라는 신분과 도지사 경력, '강자에 대한 처신법' 등 강점이 많았다. 국회청문회쯤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그가 흠결과 '의혹의 백화점'인 것을. 그래도 총리 후보자 이완구의 '맷집'은 대단했다. 터져 나오는 의혹과 여론의 질타에 그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준비된 총리' '자기관리의 달인'이 한날 허구로 드러났지만 태연하게 시치미 뚝다. 그는 검증의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했다. 그의 용의주도한 '자판기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키울 따름이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용병술'에 비교적 너그러웠던 '조중동'조차 비판 대열에 가담했겠는가. 그는 국회 청문회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의혹'을 지닌 총리 후보자로 기록될 법하다.

총리 후보자 이완구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굳센' 의지다. 박 대통령은 역시 빗발치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 세 번 잇달아 총리 후보자를 퇴짜 맞을 수 없다는 절박함도 한몫했을 터. 이완구 후보자는 마침내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의 인준 과정이 남긴 상처 또한 크다. 청와대 오만과 불통의 고착화, 의회 기능의 무력화, 민주주의 정신의 실종, 정치 불신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기능의 마비 현상'이 드러났다는 점도 적지 충격적이다. 이는 실로 위험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총리 후보자의 빗나간 언론관이 그대로 문힐 뻔했다. 박 대통령의 언론 무시 전술도 위험수준을 치닫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중동까지 비판적인 논조를 펼쳤는데도

박 대통령은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국민들 역시 이 위험한 징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문회 과정에 정치공학이 동원된 측면도 없지 않다. 여권의 '지역 민심' 전략 앞에서 언론도, 야권도 놀아났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고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떳떳지 못한 인물을,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로 천거할 수는 없는 일. 청문회 막판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충청 민심' 소동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도 냉철한 것은 아니었다.

'의혹'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선택은 특정지역 민심 앞에서 미묘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미묘한 상황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대한 존중인가, 아니면 모독인가.' 언론도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언론의 딜레마는 진지한 취재에 답이 있다.

'민심은 이완구 총리를 그토록 열망하는가, 그의 솔한 의혹을 감안한 민심인가. 그 민심은 순수하고 자연발생적인가,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플래카드는 누가 걸었는가.' <한겨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충청 민심'을 등에 업고 '이완구 고비'를 넘었다. <한겨레>도 그 들러리 구실에 충실했던 셈이다.

이완구와 함께 '2 월의 인물'로 꼽힐 인물이 원세훈이다. 이들은 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열셋말'로도 꽤 어울린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지난 9 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조직적 대선 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터다. 원세훈은 조용히 구속됐지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국정원 스스로 "선거개입은 최고 주권자 국민 위에 균림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았던가.(2007 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곧 '부정 선거'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도 큰 상처를 안겨준 셈이다. 정통성 시비를 벌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겐 국정 통수권자로서 '무한책임'이 있다. 적어도 국가기관의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의 정의'가 어찌 귀결될지는 아직 모른다. 1 심 재판부는 "정치개입이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어려운 말로,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1 심 판결문을 신랄하게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는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2 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야권을 향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며 되레 큰소리치던 모습이 씁쓸음을 자아낸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건은 묻히게 마련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언론의 무관심' 탓에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한마디는 '진정성'이다. 소통은 아름다운 말이나 논리의 산물이 아니다.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없다. 눈물도 눈물 나름이다. 더듬거리는 말, 아니 한마디 말 없이도 소통은 이뤄질 수 있다. 최고의 말은 이심전심의 말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79892.html>

[댓글중계]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앞으로가 더 걱정"

독자 의견 2015/02/27 11:05:05

[댓글중계]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앞으로가 더 걱정"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총 6회에 걸쳐 현 정부의 지난 2년을 진단하는 기획을 선보이고 있다. 통상 언론이 지적해왔던 문제점에 정부 주요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더한 이번 시리즈에 많은 누리꾼이 관심을 보였다.

"(특정 인사가 찾아와) 인사 청탁을 해서 안 받아줬더니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더라. 다음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등 전직 고위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부의 인사 개입을 지적한 기사 "청와대, 충성파 심으려 인사 지연...1년 넘게 업무 공백도"(2월 23일치 1면)에 특히 많은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no\*\*\*\*'는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잘 짚은 기사"라고 평가한 뒤, "그나저나 인터뷰한 공무원들이 뒷조사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영주\*\*\*\*'는 "이것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인가? 만기친람은 박학다식한 지도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비주\*\*\*\*'는 "대통령 곁에 진심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각료가 필요하다"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만 의지하다 보니 나라가..."라며 말을 줄였다.

2 월 25 일치 1 면에 실린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 배 준다더니...담뱃값만 2 배" 기사를 읽은 누리꾼 '흑장\*\*\*\*'은 "대통령이 노인의 가치를 '한 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모든 노인한테 월 20 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사탕발림이었다"고 평가했다. 'sm\*\*\*\*'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짧은 댓글로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봤다.

"대통령이 좀더 유연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잃었던 지지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zo\*\*\*\*'의 댓글에 154 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한편 '마당\*\*\*\*'은 "현 상황은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야권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9893.html>

[독자의견] 성별·나이 표기 삼갔으면

독자 의견 2015/02/27 11:05.54

#### 독자 의견

여성 독자가 "기사에서 여자의 경우에만 성별을 따로 표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독자는 또 이름 옆에 나이도 같이 표기하는 것에 대해 한 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인 관광객이 40 세면 어떻게 30세면 어떻게"며 "기사 흐름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를 안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나이에 집착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한겨레>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9895.html>

[독자의견] 단순 정보 넘어 대응책도 제시해야

독자 의견 2015/02/27 11:07:52

### 독자 의견

70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연일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건의했다. 독자는 “3월에도 강한 황사가 온다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중국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국제 협약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며 “<한겨레> 기사로 이런 의문점들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9894.html>

[시민편집인의 눈] 법률의 생명력

활동 기록 2015/03/27 09:56:00

[시민편집인의 눈] 법률의 생명력 / 고영재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후보...미국 가서 평일에 골프친 홍준표  
'김영란법' 저축 개연성... '한겨레'는 법정신 실현에 앞장서기를**

이른바 '김영란법'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앞길엔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내년 가을이면 '세계에 유례없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본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1 회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 대한 규정은 광범위하다.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숙박권, 초대권, 관람권, 골프 접대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망라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음습한 접대 문화, 부정 청탁 관행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삼성 장학생'이 사라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나 시민단체 모두들 환영의 뜻을 밝힌다.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계기가 돼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영란법이 청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법이라는 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법이란 '주체적인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법률은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 법률은 주도적인 실행력도, 판단력도 지니지 못했다. 법률은 법의 실행·집행자, 수용·소비자에 의해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을 따름이다. 법치주의 문화 후진국에선 두말할 나위가 없다.

때맞춰 터져 나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부패 척결' 합창이 국민 눈길을 모을 법하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 12 일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다."

닷새 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입을 맞춘 듯 말했다. "비단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어 이완구 총리의 '부패 청산'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고 격려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의 결연한 어투에서 긴장감과 함께 '어색한 부조화'를 느꼈을 법하다. 달포 전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개운치 않은 여운 탓이다.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의혹덩어리 이 총리의 민낯은 아직 생생하다. 대통령은 줄곧 비리 의혹을 지닌 후보자들을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지명해 왔다. 그 후보자들은 '금품'을 주고받은 비리를 저지르진 않았다. 그러나 그 '의혹의 비리'들이 어찌 금품수수에 비해 가벼운 일인가. 대통령과 총리의, '김영란법'과 부정부패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지사의 행태도 김영란법의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읽힌다. 그의 '미국 골프'는 몇 가지 부적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날, 미국까지 가서 골프를 쳐야 했는지, 아직 명쾌한 해명이 없다. 부인이 어떻게 합류한 것인지, 또 다른 골프 동반자는 어떤 인물인지, 그 비용은 투명하게 지불된 것인지, 회동의 성격이나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투성이다.

'김영란법' 저축 개연성이 높은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사자인 홍 지사는 '관행'에 평안을 느낀 듯하다. 언론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한겨레>도 25 일치 신문에서 다소 맥 빠진 기사를 내보냈다. "홍 지사의 공식 일정 밖의 일은 알 수 없다"는 경남도 관계자의 무책임한 핑계를 전할 따름이었다. 홍 지사와 언론의 '불감증'은 이 법이 뿌리내리기까지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듯하다.

언론인은 '김영란법'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립학교 교원과 함께 민간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터다. 과잉입법과 위헌 논란의 빌미가 된 대목이다.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거들었다. 정 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다." 국회의장의 말을 언론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언론은 김영란법과 미묘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겨레>도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 3 월 4 일치 사설 "부패 없는 사회를 향한 이정표 '김영란법'"은 그 대표적 사례다. 사설은, 언론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김영란법은 비리의 사슬을 끊자는 포괄적 부패방지법이다. 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를 넘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까지 넓어진 것도, 공직 외에 언론과 학교 역시 '맑은 물'이 아니라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부당함을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입법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설은 곧 '언론 탄압' 등 자의적 법집행 우려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언제라도 공직자·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표적사정에 나설 수 있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나쁜 의도'를 막을 방안이 함께 담보돼야 하는데도 김영란법에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 애초 언론이 공직과 나란히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 온당한지부터 의문이다." 사설의 걱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영혼 없는' 검경의 행태를 헤아릴 때.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그러나 <한겨레>는 모름지기 김영란법의 '법정신'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불의

와 편법,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법정신에. '공직자'라는 자구에 얽매어 언론인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삼는 게 합당한지 따지는 일은 부질없다. 언론은 건강한 사회,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무를 지닌 터다. 더구나 이 땅은 비리와 범법에 무감각한 엄치없는 세상이다. 이번 법은 나라의 근본 바탕, 문화를 바꾸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법정신의 실현, 곧 법의 생명력을 복돋울 <한겨레>의 활약이 기대된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129.html>

[댓글중계] 대학 캠퍼스에 퍼지는 군기문화 "한국 사회는 후퇴 중"

독자 의견 2015/03/27 09:57:22

대학 캠퍼스에 퍼지는 군기문화 "한국 사회는 후퇴 중"

#### 댓글 중계

단국대의 한 학부에서 신입생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행동규정'을 만들어 이행 중임을 단독 보도한 "대학 신입생 잡는 '무서운 선배님'"(3월12일치 10면) 기사에 많은 누리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신입생 행동규정에는 △화장 금지 △복장 규제 △선배에게 극존칭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누리꾼 '메이\*\*\*\*'는 "대학교에 입학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선배의 갑질. 이러니 사회에서도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 아닐까?"라는 의견을 남겼다. '비\*\*\*\*'은 "가장 자유로워야 할 대학이 군대와 비슷하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군사·복종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티\*\*\*\*'는 "세상은 앞을 향해 가는데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걱정했고, 누리꾼 '주식\*\*\*\*'도 "20년 전에도 이런 문화는 없었는데...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후퇴 중"이라고 말했다. 94학번이라고 밝힌 '사과\*\*\*\*'는 "이게 실제로 있는 일 맞나요? 제가 다닌 단국대는 이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요?"라고 물으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학생들을 향한 조언도 이어졌다. 'hn\*\*\*\*'는 "선배가 시킨다고 다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성인이야. 부당한 것을 지시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라고 충고했고, '나야\*\*\*\*'는 "서로 보듬어주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 대학 때 그렇게 서열 안 잡아도 사회에 나가면 지긋지긋하게 겪게 될 테니... "라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dc\*\*\*\*'는 "군에 보내도 걱정, 대학 보내도 걱정, 대학 졸업해도 걱정, 취직을 해도 걱정.... 뭐

하나 걱정거리가 아닌 게 없네요"라며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고, '살맛\*\*\*\*'은 "젊은 세대가 못된 것만 배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만큼 젊은이들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책임을 나눠지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126.html>

[독자의견] 인문교양 분야 칼럼 많이 실어주길

독자 의견 2015/03/27 09:58.37

#### **독자 의견**

40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지면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글들이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독자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기사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통찰하고 시각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많아야 신문 읽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는 "한겨레는 인문교양분야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식의 나열이 아닌 독자들에게 와닿는 글을 쓰는 기고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128.html>

[독자의견] 언론 감시 기능 위축? "무리한 해석"

독자 의견 2015/03/27 09:59.25

####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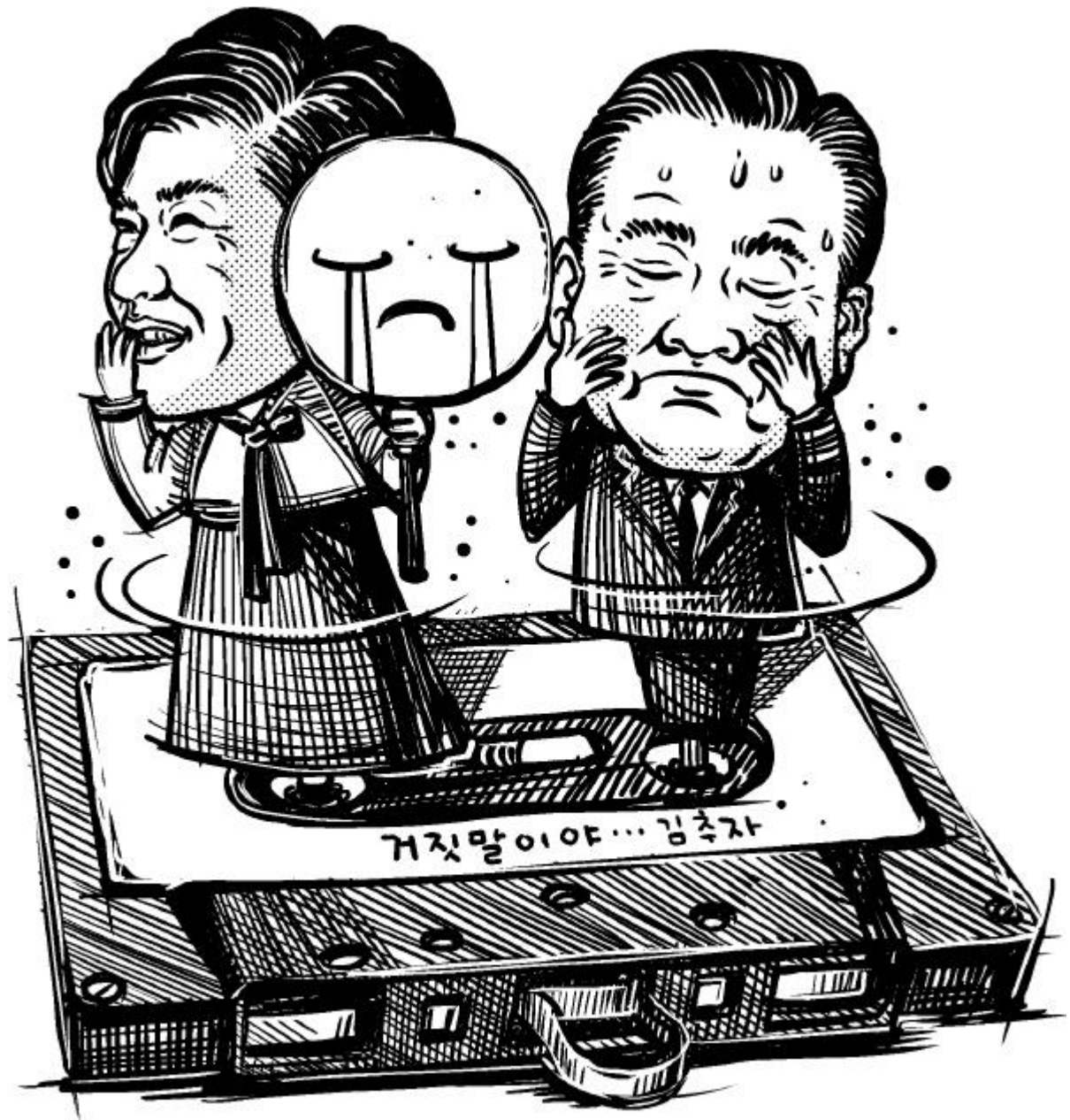
3월4일치 지면에 실린 사설 "부패 없는 사회를 향한 이정표 '김영란법'"을 읽은 창간독자가 "언론인 스스로 청렴해질 생각은 않은 채 이 법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 또 독자는 "시민들은 언론인을 접대·청탁문화의 온상으로 여긴다"며 "사설에서 이런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사회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한겨레가 퇴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127.html>

[시민편집인의 눈] 총리의 거짓말, 대통령의 위선

활동 기록 2015/04/24 13:32.52  
총리의 거짓말, 대통령의 위선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난무하는 거짓말과 구름 위 화법... '말'이 사라진 시대

한겨레는 '말의 진실성' 추적 책무에 진력하기를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는 역시 '거짓'으로 매듭지어졌다. '목숨을 걸고 던진 거짓말'도 헛일이었다. 시민들의 눈과 귀는 잇달아 그의 말이 거짓임을 증언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

는 디지털 기록들도 그에게 더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는 싸늘한 국민 여론 앞에 무릎 꿇고 끝내 총리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은 한없이 우울할 따름이다. 한 편의 저질 코미디를 본 느낌 때문이다.

'성완중 리스트'는 고성능 포탄임에 틀림없다. 박근혜 정권 탄생 전후의 핵심 인사 8인에 대한 금품 수수 비리가 담겨 있는 터다. 그 비리는 박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폭발력을 지녔다. 비리 혐의자들이 완강하게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메모'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육성'도 공개된 마당이다. '금품 수수 정황'이 거의 드러난 경우도 두세 명에 이른다.

문제는 당사자들의 '거짓말 수준'이다. 거짓말에도 품격에 있다면, 리스트 관련자들의 '거짓말 품격'은 웅졸하다. '돈 받은 일 없다. 황당무계한 말이다. 일면식도 없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거의 만난 일이 없다.' 8인이 성완중 전 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고인이 된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명은 비겁하다.

'망자의 모함'이라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돈을 주고받을 만큼 가깝거나 접촉이 거의 없는 사이'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성완중과 정권 실세들의 진실게임을 바라보는 국민은 성 전 회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실세들은 무엇이 겁나 인간적인 관계를 애써 부인하는가. 이는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받아들임 직하다.

바야흐로 거짓이 춤추는 시대, 말이 사라진 시대다. 말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진심을 전해야 할 언어가 품격을 해치면서 그 흐름은 가속화하고 있다. 말이 생명력을 잃은 사회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쓸모없다.

이 비극적인 문화적 흐름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름 위 어법'은 이름 높다. 그 어법의 두 가지 특성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무책임'과 '말로만'(진정성은 없이)이 그것이다. '제 3 자의 시선과 교과서적인 담백한 처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매특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때도 박근혜 어법의 두 가지 특성은 도드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남미 순방길에 오르기 전 말했다.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데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

세월호 참사 1 주기를 맞아 팽목항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는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 명의 실종자가 있고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헌화나 분향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

정치 개혁도, 세월호 참사의 상처도, 경제의 회생도 대통령의 술선수범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정치 개혁은 대통령의 실천 의지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빈약할 때 개혁의 동력은 기대할 수 없을 터. '성완중 리스트'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의 충격적인 정치 비리가 무엇이겠는가. 참사 1 주기에 굳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외교적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희생자 가족들은 가슴이 아프다.

성완중 리스트는 세 갈래 파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의 위선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사정 대상이 부패 척결을 외쳤으니 웃음거리 아닌가. 비리에 익숙한 정치인들의 뻔뻔함 뒤에

숨어 있는 '비겁성'도 충격적이다. 망자와 대한 예의와 신의가 평범한 수준을 한참 밑돌다니, 그들이 과연 사회지도층 인사들인가. 또 리스트는 검찰권의 탈선이 국민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실세 그룹을 움직일 만큼 막강한 로비력을 지닌 인물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평범한 시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박근혜 정권이 눈여겨볼 대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곧 새 총리 후보자를 선보일 것이다. 그 인물은 대통령의 의지와 진심을 드러낼 것이다. 대통령은 과연 이번엔 누구를 내세울까. 대통령의 '노심초사'가 보인다. 괜히 트집 잡는 야당 국회의원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총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보인다. 고려 사항도, 고민거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다. 답은 단순한 데 있다. 인재 풀을 과감히 넓히는 일이 그것이다. 지역과 철학에 얽매이지 말 일이다. 깨끗한 인물, 신선한 인물로 국민의 닫힌 가슴에 도전하라. 대통령의 백마디 다짐보다 단 한번의 멋진 총리 기용이 국민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까다로운 청문회 과정, 야권의 까탈을 탓하지 말라. 대통령이 마음을 열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어디 한둘인가.

언론도 사라진 말의 시대 복원에 나설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말은 진실과 정의, 소통의 수단이다. 말이 살아 있을 때, 상식도 염치도 작동되는 법이다. 정치 개혁도 말의 희생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될 때만 가능하다. 사회 발전 에너지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풍토에서 꽃피지 않겠는가. 언론이란 한마디로 '국가나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추적하는 공기'다. <한겨레>에 부여된 책무이자, 강점을 곱씹게 하는 대목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사족 한마디를 보탠다. 성완중 전 회장은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빛나간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수사는 이완구가 주도한 기획수사다. 나에게 적용된 혐의는 억지로 부풀려졌다.' 그의 죽음을 부른 결정적 요인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고발한' 검찰 수사 방향의 정당성,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추적하는 기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겨레> 지면에도.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8177.html>

[댓글중계] "가능할 수 없는 아픔, 끝까지 함께 하겠다"

독자 의견 2015/04/24 13:36.09

#### 댓글 중계 "가능할 수 없는 아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한겨레>는 참사 현장을 찾은 르포, 유가족 인터뷰, 그래픽으로 보는 세월호 인양 절차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속 유가족은 슬픔 위에 분노가 더해진 모습이었고,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었다. 기사를 읽은 누리꾼 반응도 1년 전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먼저 유가족을 위로했다.

"식발한 아버지가 흐느꼈다, 딸에게 줄 꽃을 꼭 쥔 채..."(4월 16일치 1면)를 읽은 누리꾼 'km\*\*\*'은 "부모가 되니 알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내 자식을 꺼내고 싶은.... 감히 힘내시란 말조차 할 수 없네요"라고 말했다. 'mj\*\*\*'은 "이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건 진상 규명뿐"이라고 적었고 '이재\*\*\*'은 "아직 바닷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꾼 'ch\*\*\*'는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면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1년 전 그날은 여전히 미스터리"라며 의아해했고 'b\*\*\*'는 "봄에 피는 꽃을 보기가 싫어졌다. 당신들이 그 꽃으로 환생했을 것 같아서. 그 꽃들을 보기가 부끄럽다"며 잔혹한 4월을 이야기했다.

'aa\*\*\*'는 "지금 유족분들은 치유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다. 2주기, 5주기 때는 유족분들이 '국민·국가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몰지각한 악성 댓글을 읽은 누리꾼 'al\*\*\*'는 "무능한 정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유가족들을 향한 도 넘은 비난"이라며 "위로는 못 해줄망정 욕은 하지 맙시다"라며 일침을 가했고 'en\*\*\*'도 "잊지 않고 행동하는 분들도 많으니 몇몇 악플러로 인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8174.html>

[독자의견] 주중에도 보고 싶은 친절한 기자들

독자 의견 2015/04/24 13:37.37

#### **독자 의견 주중에도 보고 싶은 친절한 기자들**

20대 독자가 4월11일치 지면에 실린 "'세금폭탄' 때문에 '왕따' 된 이야기 해드릴게요"를 읽고 의견을 전했다. 독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 정리부터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 이유와 정부의

의도까지 한번에 정리해줘서 좋았다”며 “덕분에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친절한 기자들’을 꼼꼼하게 읽는 편이지만 이번 기사는 그중 단연 최고”라며 “이 코너를 다른 요일에도 배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8175.html>

[독자의견] 사전에는 없고 한겨레에는 있는

독자 의견 2015/04/24 13:39.42

**독자 의견** 사전에는 없고 한겨레에는 있는

한 독자가 “한겨레 토요일에 실리는 코너 ‘김선영의 드담드담’에서 ‘드담드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민편집인실로 관련 뜻을 문의했다. 독자는 “한겨레를 통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일본인 친구가 ‘드담드담’의 뜻을 궁금해하기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드담드담’은 사전에는 없는 단어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뜻을 담은 표현이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8176.html>

gpdljsj 2015/05/28 22:39.33

디지털신문 바뀌고는 안읽게... 한국일보도 바뀌고는 안보는데 기사가 한눈에 안들어오고 복잡하다는 느낌 예전게 익숙해서 그런지 바뀌고는 인터넷 한겨레 보는 횡수줄었네요.

참고로 경향신문.조선일보가 한눈에 쓱~ 들어옴. (어디다 써야 할지 몰라 여기에 남깁니다)

한겨레시민편집인실 2015/05/29 11:19.30

gpdljsj님 의견 고맙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 개편 이후 온라인으로 한겨레 기사를 읽는데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시민편집인의 눈] 정의는 우리에게 '사치품'인가 / 고영재  
활동 기록 2015/05/29 11:17.43

[시민편집인의 눈] 정의는 우리에게 '사치품'인가 / 고영재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강기훈 누명은 정의 부재의 증거...정의와 거리 먼 황교안 총리후보  
헛갈려하는 독자 위해 언론이 엄정한 잣대로 정의를 되세워야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괴이한 일'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만난다.

국가권력이 무고한 청년에게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죄목으로 옥살이를 강요했다. 청년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다. 청년이 누명을 벗는 데는 24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20대 청년 강기훈은 어느새 50대 중년을 맞았다. 대법원은 최근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역사적 판결이 내리던 날, 정작 강기훈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폭력 앞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힌 강씨의 참담한 심경을 어찌 짐작하리오. 다만 그를 응원하는 이들의 소감을 통해 그의 속마음을 어렵듯이 헤아릴 따름이다. "무죄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감격스럽기보다는 비통할 뿐이다.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우리는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의 감회다.

'24년 전 청년' 강기훈은 무죄확정 나흘 만에야 심경을 밝혔다. "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덧붙인 한 구절이 처절하다.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를 수사했던 검찰은 그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고도 진실을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심경은 육성이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전해졌다.

강기훈은 병을 앓고 있다. 간암이다. 풀리지 않는 억울함, 잇따라 부모님을 저세상으로 보낸 자책감, 경제적 궁핍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다. 정기검진만 제대로 받았어도 일찍 이상신호를 알아차렸을 텐데, 공사판 막노동을 전전하기도 했던 그의 불안정한 생활은 그런 호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특히 그 사건이 터진 5월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며 씁쓸해했다.<한겨레> 김의겸 기자의 칼럼에서)

'명백한 날조 사건'이라는 점에서 강기훈 사건은 사법 사상 치욕적 기록의 하나로 남게 됐다.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손잡고 한 인간에게 파멸의 길을 강요한 불법이 확인된 마당에 한마디 사과가 없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문득 검사, 판사들의 젊은 시절 가슴속 '정의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심오한 '정의론'을 펴자는 것은 아니다. '상식'을 말할 따름이다. 정의란, 사전의 뜻풀이를 빌리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아닌가. 적어도 한때는 '법의 정신'을 생각하며 법조인을 꿈꾸었을 검사와 판사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파렴치집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법의 정의'는 엄정함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장고 끝에 '공안 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선택했다. '국민통합' 대신 '공안총리'를 선택했다는 평판이 자자하다. 여권 일각에서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국민 뜻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의'를 저버린 셈이다. '대통령 정의'의 출발점은 국민을 섬기는 데 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정의감',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살펴볼 차례다. 총리에게 요구되는 정의의 요체는 대통령에 버금하는 고도의 균형감과 통찰력에 있다. 총리 자리는 문자 그대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명권자의 뜻이 국민의 여망에 우선할 수는 없다.

쓸개도 없이, 철학도 없이,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국정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총리가 될 리 없다. 특히 고도의 균형감각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구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현대사회는 지역과 계층, 세대와 정파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황 후보자는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정의'에 어긋나는 황 후보자의 행태와 행적들은 넘친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는 대통령 눈치 보기의 달인이라는 점이 걸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법무 장관으로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전력은 치명적이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선거부정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행동이었던 터다.

그는 2013년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석연치 않은 동기와 과정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적 취약성뿐만이 아니다. 그의 가치관, 철학의 편향성에서도 황 후보자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한 그의 견해는 섬뜩하다.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정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생뚱맞은 말은 국민 마음을 다시 한 번 긁어 놓는다.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 요청서에서는, 황 후보자가 '국민소통과 사회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뤄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회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

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황 후보자 국회청문회를 낙관하는 듯하다.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미 거친 관문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그 점을 의식해 그를 점찍은 측면도 없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장관과 총리는 다르다. 장관 청문회 때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다.

여야의 주장, 평가는 솔하게 엇갈린다.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듯하다. 시민들은 헛갈리고 정치 불신은 날로 치솟는다. 엄정한 '정의'의 잣대는 '언론 정의'의 출발점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5.html>

[독자의견] 성차별적인 기고문 게재 지양해야

독자 의견 2015/05/29 11:22:40

### 독자 의견

9일치 지면에 실린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식을 기다린다” 기사를 읽은 여성 독자들이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항의했다. 한 20대 독자는 “양육을 집에서 애나 보는 걸로 묘사한 것은 성차별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30대 한 여성은 “기사뿐 아니라 삽화에서도 남자 혼자 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여자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며 “왜 이런 내용을 심기로 결정한 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7.html>

[독자의견] 전날 경기 결과 알 수 없어 아쉬워

독자 의견 2015/05/29 11:23.47

### 독자 의견

프로야구 팬이라고 밝힌 독자가 "우천취소와 같은 변수가 없는 한 프로야구는 하루에 다섯 경기가 열리는데 한겨레 21일, 27일치 스포츠면에는 5경기 중 3경기에 대한 결과만 실렸다"고 지적했다. 독자는 "이닝별 스코어보드와 현재 팀순위표, 오늘의 경기 등을 알려주는 신문과 비교했을 때 한겨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라며 "이런 부분이 독자에게 불친절하게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8.html>

[댓글중계] 아동학대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길"

독자 의견 2015/05/29 13:37.51

### 댓글 중계

한겨레는 지난 4일부터 옛새간 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시리즈를 내보냈다. 국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아동학대 사례 개요, 판결문, 공소장 등을 심층분석한 탐사기획팀은 6일 동안 27개의 기사를 쏟아냈다. 학대받다 숨진 아이들을 새롭게 새기려는 시도에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였다.

시리즈의 첫 기사인 "13 살 109 cm 7.5 kg 소녀는 미라 같았다"를 읽은 누리꾼 'su\*\*\*'은 "두려운 마음에 제목만 읽고 신문을 내려놓았다가 한참이 지난 뒤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라고 썼다. 아이의 엄마가 유기치사죄로 4 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내용에 'gu\*\*\*'는 "자식은 13년을 괴로워하다 죽었는데 그걸 방치한 엄마는 4년형이 말이 됩니까. 이건 살인이잖아요!"라며 아동학대에 관대한 처벌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학대받은 아동이 숨지기 전에 온몸 가득한 멍과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 등으로 구조신호를 보냈음에도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가 침묵했다는 기사를 읽고 한탄과 반성의 댓글을 남겼다. 'ch\*\*\*'는 "우리 모두 가해자입니다. 앞으로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을 가집시다"라고 말했고, 'gg\*\*\*'는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방조자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와 동반자살도 살인"(5월 8일치 8면) 기사에 누리꾼 '오른\*\*\*'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못해?'라는 인식은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학대를 줄이는 방법으로 아동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아이와 사회의 연결고리인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에 'su\*\*\*'는 "아동에게 투표권이 없으니 아동복지 관련 정책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ca\*\*\*'는 "정부는 엉뚱한 곳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연봉부터 올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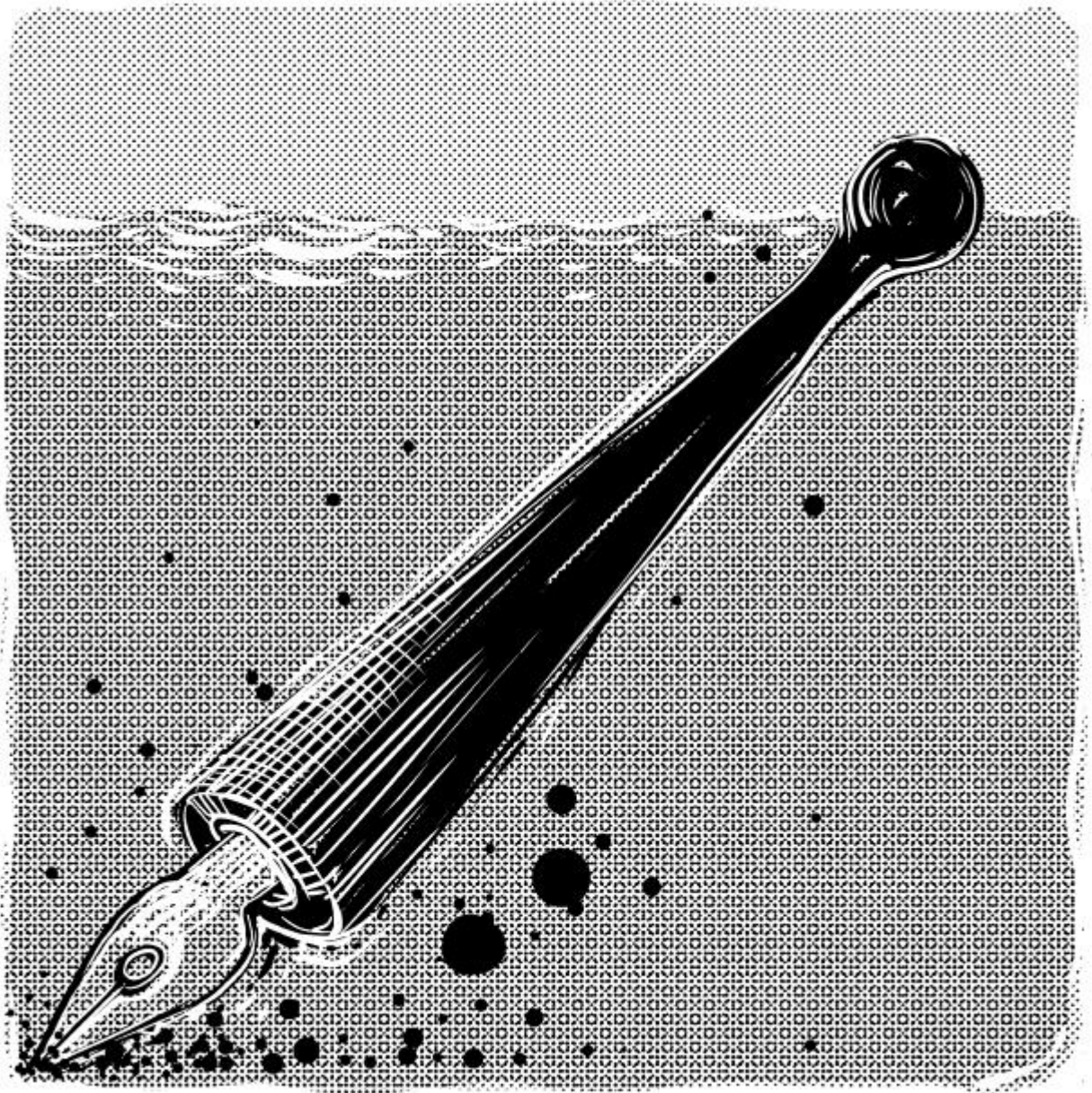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6.html>

[시민편집인의 눈] 신문의 소생을 기다리며

활동 기록 2015/06/26 14:33:19

[시민편집인의 눈] 신문의 소생을 기다리며 / 고영재



옳고 그름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가치 판단이 종이신문 존재 의의

치열하게 현장 뛰며 사실보도 넘어 진실을 보여주는 '한겨레' 되길

신문은 한때 여론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요리하는' 데도, 박정희가 무자비한 폭압과 독재를 펴는 데도 신문은 요긴한 '도우미'였다. 한 일간지 대표는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위세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 신문이 '생존'을 위협받는 세상이다. 독자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좋아든다. 그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너도나도 신문을 구독하던 시대의 풍경은 전설로만 남아 있다. 그 근본 원인이 '디지털'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디지털 태풍' 앞 신문의 신세는 '가물거리는 촛불'이다. 맞다. 종이신문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매체다. 특히 디지털 문화에 젖은 젊은이들에겐 어딘지 낯설다.

그렇다고 종이신문의 매력까지 사라진 것일까. 그 가치, 존재 의의도 무의미해진 걸까. 아니다. 아날로그 문명의 '통찰력'이야말로 디지털 문명의 '에너지'이자 '엔진'이다. 또한 정보 홍수 시대는 '정제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신문은 살아남을 이유가 충분하다. 디지털 시대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고 믿는다. 언론을 말할 때 떠오르는 두 마디, '가치'와 '신뢰'가 그것이다. 언론은 민심이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언론은 또한 양심적인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 신문의 진정한 위기는 가치체계의 혼돈과 신뢰의 파탄에 있다. 신문의 핵심 덕목을 해치는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본다.

'정보', '콘텐츠'는 디지털 시대 신문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도전적인 실험도 더러 눈에 띈다. 문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곧 '정보지'에 집착함으로써 신문의 본령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지가 아니다.

세상은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악한 인간은 빼어난 말솜씨로 진실을 호도한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분간하기 어렵다.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권력은 옆길로 새기를 좋아한다. 권력의 단맛을 좇다 보면 일탈하기 십상이다. 기업가와 노동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논다. 세상을 보는 그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세상의 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문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권력의 탈선을 견제할 책무를 신문에 부여한 것은 사회적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신문들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신문의 사명은 잊힌 지 오래다. 단순한 정보지가 아닌 '정론을 담은 공기(公器)'가 신문인 것을. 정론은 언론 정신이자, 시대의 '혼'이다. 정론이 사라진 시대는 영혼 없는 시대를 의미한다. 정론을 포기한 신문은 '짜라시'에 지나지 않을 터. 짜라시 시대의 혁파가 절박하다.

신문을 이념지도에 꿰맞추는 버릇도 한국 언론의 병폐다.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신문은 참언론이 아니다. 적어도 주요 일간지 가운데 스스로 정파지임을 안팎에 분명히 밝힌 신문은 없다. 사실을 보도하는 데 이념적 성향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비판적 기사 역시 보도 원칙에 따라 작성할 일이다. 사회적 상식과 윤리·도덕, 가치체계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이념성'을 편향적 보도의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념적 딱지'를 붙인 집단에 대한 '맹렬한 비판 기사'에서, 또는 권력의 탈선에 대한 축소 보도나 '침묵'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이념성의 과장, 정상적인 언론에 대한 '이념적 오해', 사회적 분열의 가속화 등을 초래하곤 한다. 편향적 보도 태도에 이념성을 부여하는 것은 난센스다. 차라리 '제대로 보도하는 신문'과 '제멋대로 보도하는 신문'으로 나누는 게 유용한 구분법이 될 수 있다.

이념적 분류법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원천봉쇄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사람마다 그 성향은 제각각이다. 사람 수만큼 다양한 색깔을 보이게 마련이다. <한겨레>도 <조선일보>도 그 점에선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유일 체제'가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이다. 예컨대 40년 전 그 뜨거운 저항의 물결 넘실대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평온'은 불가사의다.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역동성'이나 '활력'도 시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현장'은 언론인에게 부여된 최고의 특혜다. 말이나 학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전국 순례길에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은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때마다 농업 부문의 피해를 강조하지만, 그 실상을 파고드는 농촌 르포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부처나 기업의 보도자료 베끼기로는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최근 '천재 소녀'의 미국 명문대 입학 허가 기사는 오보로 드러났다. 온 나라의 신문 방송이 거짓 제보에 놀아났다. 이는 예고된 '참사'였다.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은 최근,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미디어 오늘>은 '침몰한 언론, 진실을 인양하라'고 질타했다.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언론은 이미 죽은 언론이다. 비판 기능의 마비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다각적인 정보망을 통해 감지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창조성의 회복은 놓칠 수 없는 언론의 과제다. 현대 사회 갈등의 해소와 통합,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도 언론의 몫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사실'을 뛰어넘는 통찰력의 예술이다. 창조성은 사회적 활력과 역동성을 일깨울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언론의 창조성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에서 창출될 수 있다. 스스로 비울 때 마음의 눈도 떠지는 법.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한겨레>는 그나마 이 땅에 작은 위안인가. 빈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신문들이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지난 2년 동안의 시민편집인 직을 마치면서.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7524.html>

[댓글중계] 주한미군의 탄저균 사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독자 의견 2015/06/26 14:34.21

#### 댓글 중계

#### 주한미군의 탄저균 사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관심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쏠린 사이, 주한미군이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맹독성 세균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주한미군, 탄저균보다 맹독인 ‘보툴리눔’까지 실험 의혹”(6월4일치 1면) 기사에서 주한미군이 생물학전 대응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탄저균만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들여와 실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두려운 마음을 나타냈다. ‘so\*\*\*’는 “어쩌면 메르스보다 미국이 더 무서운

존재할 수 있다”며 “우리는 세균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hu\*\*\*’는 “탄저균도 마스크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풍자 댓글을 남겼고, ‘파랭\*\*\*’은 “탄저균 무섭다. 그러나 이 사태를 그냥 지나가는 우리 정부가 더 무섭다”고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한국 쪽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야 함에도 탄저균 표본 반입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7월에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탄저균 사고’를 다루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ok\*\*\*’는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에 더 화가 난다. 한국군이 미국에서 이런 실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적었고, ‘dh\*\*\*’는 “이게 나라냐. 아르바이트생도 이런 식으로는 일 안 하겠다”고 지적했다. ‘my\*\*\*’는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한국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라고 말했다. ‘sk\*\*\*’는 “안전한 것은 미국에서. 위험한 것은 한국에서”라고 썼고, ‘sp\*\*\*’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적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97521.html>

[독자의견] ‘집창촌’ 기사, 독자의견 엇갈려  
독자 의견 2015/06/26 14:36.53

### 독자 의견

#### ‘집창촌’ 기사, 독자의견 엇갈려

지난 13일치 지면에 실린 “홍등이 켜지자 은빛 구두들이 유리문 밖으로...” 기사를 읽은 남성 독자가 “집창촌은 불법”이라며 “불법현장을 고발해야 할 기자가 현장을 너무 감성적으로 풀어낸 것 같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을 굳이 <한겨레>에서 기사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 여성 독자는 “여자 기자가 ‘성매매를 하는 방’에 직접 들어가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부분 등이 타 매체의 르포들과는 다르게 느껴졌다”며 “이 기사를 계기로 성매매 문제를 양지에서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97522.html>

[독자의견] 한겨레, 기사 검색 기능 강화해야

독자 의견 2015/06/26 14:38.53

### 독자 의견

#### 한겨레, 기사 검색 기능 강화해야

한 독자가 시민편집인실에 전화해 “지면에서 본 기사를 온라인에서 다시 읽고 싶어 검색을 하면, 지면용 제목과 온라인판 제목이 달라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제목일 때도 검색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며 “키워드를 넣었을 때 원하는 기사가 검색될 수 있게 검색 서비스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97523.html>